

제426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11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8)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7)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5)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1)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2)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3)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4)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6)
-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5)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6)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8)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4)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6)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8)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9)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2)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6)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4)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1)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3)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4)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5)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44)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9)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4)
2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1)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3)
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9)
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8)
3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5)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0)
32.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3)
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7)
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0)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5)
36.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준혁 의원·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9)
37.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0)
3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8)
3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7)
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8)
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5)
4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6)
4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1)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3)
4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9)
4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8)
4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3)
4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9)
4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2)
50.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3)
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5)
5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9)
5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2)
5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3)
55.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6)
5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47)

5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5)
5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5)
5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7)
6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7)
6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3)
6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5)
6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6)
6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0)
6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1)
6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2)
6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7)
6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9)
6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5)
7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4)
7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4)
7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4)
7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9)
7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2)
7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0)
76.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0)
77.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5)
7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8)
7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9)
8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1)
8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9)
8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5)
8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8)
84.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0)
8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3)
8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7)

87.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9)
 8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4)
 8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7)
 9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5)
 9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2)
 9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5)
 9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21)
 9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1)
 9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2)
 9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9)
 97.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학생 성폭력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김가을 외 53,65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81)
 - 보육료인상에 관한 청원(남궁빈 외 50,07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93)
 98. 현안질의(리박스쿨)
-

상정된 안건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8)	8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7)	9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5)	9
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1)	9
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2)	9
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3)	9
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4)	9
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6)	9
9.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5)	9
1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6)	9
1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8)	9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4)	9

1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6)	9
1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8)	9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9)	9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2)	9
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6)	9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4)	9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1)	9
2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3)	9
2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4)	9
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5)	9
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4)	9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9)	9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4)	9
2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1)	9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3)	9
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9)	9
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8)	9
3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5)	9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0)	9
32.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3)	9
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7)	9
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0)	10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5)	10
36.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준혁 의원·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9)	10
37.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0)	10
3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8)	10
3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7)	10

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8)	10
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5)	10
4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6) ..	10
4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1)	10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3)	10
4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9)	10
4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8)	10
4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3)	10
4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9)	10
4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2) ..	10
50.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3) ..	10
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5)	10
5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9)	10
5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2) ..	10
5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3)	10
55.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6)	10
5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47)	10
5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5)	10
5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5)	10
5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7)	10
6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7) ..	10
6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3)	10
6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5)	10
6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6)	10
6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0)	10
6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1)	10
6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2)	10
6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7)	10
6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9)	11
6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5)	11
7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4)	

.....	11
7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4)	11
7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4)	11
7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9)	11
7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2)	11
7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0)	11
76.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0)	11
77.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5)	11
7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8)	11
7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9)	11
8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1)	11
8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9)	11
8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5)	11
8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8)	11
84.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0)	11
8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3)	11
8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7)	11
87.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9)	11
8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4)	11
8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7)	11
9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5)	11
9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2)	11
9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315)	11
9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321)	11
9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1)	11
9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2)	11

9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9)	11
97.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4
- 학생 성폭력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김가을 외 53,65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81)	
- 보육료인상에 관한 청원(남궁빈 외 50,07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93)	
98. 현안질의(리박스쿨)	14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입니다. 정권이 교체되어 여당 소속의 교육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돼 감회가 남다릅니다. 제가 교육위원장에 부임하면서 일관되게 강조한 바와 같이 소통을 중시하는 상임위 문화는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도 감시와 견제 기능을 엄격하게 수행하는 모범적인 교육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역지사지하면서 여야를 떠나 공정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법 활동을 통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도 여야 위원님들의 교육위 의정활동을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법률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안을 상정하고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현안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최근 문제 된 리박스쿨에 대한 여러 의혹을 검증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하게 실시하게 됐습니다.

리박스쿨은 극우 역사교육단체로서 불법 댓글 조작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10여 개의 위장단체를 설립해서 조직적으로 늘봄학교에 침투해 초등학생들에게 독재 미화 등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를 장관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리박스쿨을 사실상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현안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여야 할 현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끝내 오늘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이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교육부장관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이유를 들며 국회 출석 의무를 회피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교육부장관이자 이재명 정부에서도 현재까지 교육부장관으로 재직 중인 이주호 장관은 이번 리박스쿨 사태에 대해 결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8)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7)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5)
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1)
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2)
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3)
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4)
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6)
9.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5)
1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6)
1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8)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4)
1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6)
1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8)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9)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2)
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6)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4)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1)
2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3)
2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4)
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5)
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4)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9)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4)
2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1)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3)
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9)
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8)
3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5)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0)
32.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3)
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7)

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0)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5)
36.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준혁 의원·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9)
37.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0)
3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8)
3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7)
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8)
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5)
4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6)
4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1)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3)
4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9)
4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8)
4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3)
4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9)
4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2)
50.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3)
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5)
5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9)
5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2)
5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3)
55.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6)
5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7)
5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5)
5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5)
5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7)
6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7)
6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3)
6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5)
6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6)
6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0)
6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1)
6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2)
6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7)

6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9)
6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5)
7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4)
7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4)
7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4)
7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9)
7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2)
7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0)
76.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0)
77.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5)
7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8)
7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9)
8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1)
8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9)
8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5)
8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8)
84.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0)
8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3)
8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7)
87.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9)
8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4)
8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7)
9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5)
9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2)
9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5)
9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21)
9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1)
9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2)
9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9)

(14시07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1항부터 96항까지 9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선희 의원님 의사일정 25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6항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백선희 의원**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살인사건은 우리 교육현장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원이 오히려 범죄의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은 교육기관의 구조적 문제와 대응체계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 학교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되더라도 학교장의 재량이나 모호한 내부지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변화들을 담고자 했습니다.

첫째, 교내에서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확인될 경우 학교장이 즉시 분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습니다.

둘째, 해당 교직원에게는 필요시 심리상담, 의료지원, 재교육 등 적절한 개입과 회복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단순히 사후적인 안전조치를 넘어 위험징후를 조기에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현장의 구조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생명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교직원의 정신건강과 조직 내 신뢰 회복을 함께 도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백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의사일정 73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대식 의원** 존경하는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산 사상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초등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사건 발생 전에 해당 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즉각 분리조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참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의 폭력행위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교장이 당사자들을 분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학교에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학생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방학기간 중 진행되는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동 법률안을 통해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들을 분리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장의 임무에 학교시설의 안전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의 후에 반드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의사일정 80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제가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작년 11월 통과 및 12월 공포되어 조만간 6월 21일 시행되는 새 법의 골자입니다. 교직원의 부당한 책임이 경감되고 좋은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교직원과 함께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보조 인력은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면책 적용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이 제대로 될까 우려들이 있습니다. 보강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학교장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한 보조 인력들도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면책 적용 기준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의무를 다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새 법에 따른 면책 적용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보조 인력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안전하고 충분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학교 현장을 위해 숙고하여 마련한 새 법이 조만간 6월 21일 시행됩니다.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보강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본 법안에 대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해 주신 모든, 세 분 의원님들께서 학교안전사고 및 교권 강화에 대한 법안을 제안설명해 주셨는데요. 법안소위 위원장님이신 문정복 간사님께서 세 분 의원님들의 말씀 잘 감안해서 빠른 법안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의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질의……

○백승아 위원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일단은 이 법안 관련된 제안설명에 대한, 혹시 질의 있으세요? 5분 드릴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의사일정 하고 백승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의사일정 1항부터 96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문정복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해 주십시오.

97.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학생 성폭력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김가을 외 53,65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81)

- 보육료인상에 관한 청원(남궁빈 외 50,07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93)

(14시16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97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계류 중인 청원 2건의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 현안질의(리박스콜)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98항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승아 위원님, 차관의 보고 이후 질의 시작 전에 의사발언해 주세요.

○백승아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교육부장관을 대신해 오석환 차관이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번 리박스쿨 사건과 관련된 교육부의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어떻게 리박스쿨 관련 강사가 학교에 출강하게 되었는지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편향된 정치활동 논란이 있는 리박스쿨은 2024년 1월부터 ‘늘봄 행복이 교육’이라는 강사 교육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발급하는 민간 자격을 교육부 인가 자격처럼 홍보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였고 수강생 일부가 댓글공작팀으로 활동하고 또 일부는 학교에도 출강한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언론 보도 후 교육부의 확인 결과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단체가 서울교대와 과학·예술 프로그램을 함께 공급하기로 2024년 10월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서울교대는 창의재단의 프로그램 공급 사업 공모에 참여해 2024년 11월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한국늘봄교육연합회의 과학·예술 프로그램은 25년 1학기에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공급되어 11명의 강사가 출강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번 리박스쿨 사건에 대해 교육위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주입하려 한 의도적인 침투행위라고 우려하셨고 교육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리박스쿨 관련 강사가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편향된 관점의 강의 또는 발언이 이루어졌는지를 전수 점검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프로그램을 공급한 10개 학교는 6월 2일 즉시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고 대체 강사를 지원했습니다. 6월 4일부터는 교육부, 서울교육청, 창의재단이 함께 10개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 면담을 통해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추가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해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청과 함께 관련 민원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서울교대의 사업 수행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전문가 팀을 구성해 한국늘봄교육연합회의 프로그램 내용을 점검했고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서울교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수행 적정성을 서면 점검하고 있으며 서울교대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교대를 통한 프로그램 공급과 별개로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전국 모든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로 지난 5년간 활동한 강사에 대해 리박스쿨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해당 강사의 교육의 중립성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교육청과 함께 별도로 점검하고 문제 확인 시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공급기관 역시 소속 강사의 리박스쿨 관련성을 전수조사하여 리박스쿨 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점검·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되지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교육의 중립성 위반 등의 문제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교육청이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언론에 보도된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 정책자문위원임을 확인하고 6월 1일 사건 인지 즉시 교육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해촉하였습니다.

모든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교육적 가치입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의 중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 것에 매우 안타깝고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으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승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이주호 장관의 국회 출석 거부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의 불법계엄과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국무위원들에게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셨는데요. 교육부장관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호 장관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실의 무덤 같은 깡통 인수인계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주호 대통령권한대행 그리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두 사람은 국정 운영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에 직원도 없고 컴퓨터·프린터 없는 깡통 인수인계를 한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통령비서실장입니다. 정말 작정하고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방해한 장본인들입니다.

계엄과 내란에 따라 6개월 동안이나 국정 공백이 이어졌는데요. 이 국정 공백이 더 이상 없도록 새로운 대통령께 직접 보고는 못할 망정 대통령실을 깡통으로 만들어서 국정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주호 장관의 국회 불출석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불법행위로 여야를 떠나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엄중히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없으시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상임위를 하게 됐네요. 모두 다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지역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오늘 장관님이 안 오셔서 차관님께 대신 질의하게 된 것 참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제가 역사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번 리박스쿨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본 것 중에 좀 심각한 것은 리박스쿨의 극우적 사관이 단순하게 학교에 있는 어린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강사를 양성한다는 내용으로 성인들에게까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투트랙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리박스쿨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다시피 학생들을 자체 모집해서 역사에 대한 잘못된 교육뿐만이 아니라 체험학습 강사들한테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물론 공과라는 게 존재하지요. 세상의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악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있는데 잘못된 평가는 무조건 없애고 어쨌든 잘한 것만 부각시킨다? 그것도 일종의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리박스쿨에서 얼마나 잘못된 교육이 있었는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같이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지요.

(14시2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2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영상 보셨지요?

차관님, 이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못 봤습니다.

○김준혁 위원 리박스쿨에서 다 지웠는데 저희가 이전부터 보느라고 영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저희 의원실에 영상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영상에서 나오는 강의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매우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김준혁 위원 매우 부적절하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김준혁 위원 제가 다음 주에 일본 야마구치현에 있는 장생 탄광이라고, 조세이 탄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유해 발굴하러 갑니다. 조선인들 138명이 수몰돼서 돌아가셨는데 여태까지 유해 발굴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군함도도 다녀오고 동경에 있는 근대산업 전시관도 다 다녀왔는데 저렇게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왜곡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 위안부들 끌려갈 때 12세 13세 소녀들 끌고 간 것들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니라고 하고 무슨 공창제 이런 얘기하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

다음 영상 한번 보시지요.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받은 어린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게 더 충격적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저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부가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교육이, 지금까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가리지 않고 가르쳐 왔던 역사교육이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김준혁 위원** 충격이지요, 어떻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교육이 단순하게 그냥 교육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 전문 내용 기억하십니까? 헌법 전문은 제일 먼저 3·1운동을 통해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그리고 4월 혁명, 4·19혁명을 계승한다 그다음 세 번째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그때 이승만 대통령 대통령으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됐지요. 도산 안창호 선생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돼서 나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게 두 번이나 있는 겁니다, 상해임시정부 때하고 그리고 4·19 때하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높이 평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역사교육 그리고 4월 혁명과 관련된 이 엄청난 내용들을 부정하는 이 내용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교육부가 역사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리박스쿨 같은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1차는 먼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서지영입니다.

방금 김준혁 위원님께서 학교에서 하는 강의가 아니라 리박스쿨에서 하는 강의에 대한 평가를 보여 주신 것 맞으신가요?

○**김준혁 위원** (고개를 끄덕임)

○**서지영 위원** 지금 리박스쿨 상황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까, 차관님?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어떤 내용을 수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경찰 수사의 시작 단계는 댓글공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공유받지 않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이 상황을 보면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첫 번째 쟁점이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교사들이 양성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크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들이 댓글공작을 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교육

을 했는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그러한 역사교육이 이루어졌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이따가 차근차근 질문을 주시면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리박스쿨이라는 곳이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교육, 그 늘봄학교랑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거기에서 양성된 교사들이 했던 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현재 리박스쿨로 출발한다고 생각되는 늘봄교육 연구회를 통해서 제공된 2개의 프로그램은 과학 프로그램하고 예술 프로그램입니다.

○서지영 위원 과학 프로그램과 예술 프로그램에서 지금 존경하는 김준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우려하셨던 소위 말하는 편향된 역사관 교육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과학 실험 교육인가 그리고 예술 프로그램 교육에서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일차적으로 저희가 사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교대를 시작으로 해서 운영기관으로 10개 학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행했는데 그 과정에서는 과학 프로그램과 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서지영 위원 정확한 과목명이 뭔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확한 과목명은, 두 가지 이름입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자료 1쪽의 ‘두근두근 신나는 실험과학’하고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이 2개의 교육과정입니다.

○서지영 위원 첫 번째 쟁점일 수 있는 잘못된 역사관을 학교 현장에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두근두근 신나는 과학 실험 교실 그리고 오감으로 느끼는 미술교육 여기에서 과연 역사관을 주입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식적으로 별로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항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학교 현장 방문을 한 결과에서는 교육에 직접, 역사교육과 관련된 교육은 현재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확인해야 되는 절차를 저희가 거칠 예정입니다.

○서지영 위원 학부모님들로부터 문제 제기나 항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근두근 실험과학이나 오감 미술교육에서 과연 그러한 잘못되고 편향된 어마어마한 역사교육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이 댓글공작 쟁점인데요. 이 댓글공작 쟁점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편으로는 왜 교육위에서만 이것을 다루는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댓글공작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 정치적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교육부에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사실 행안위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인 것 같고 행안위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댓글공작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규모인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댓글공작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이 더 클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저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께서 출석하셔서, 댓글공작의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한번 청취해 보는 것이 마땅치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리박스쿨 문제는 자체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이것이 과연 정부와 관련이 있었느냐, 교육 현장과 관련이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바라보고 저희가 다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이게 참, 기사를 보고 제가 너무나 놀랐는데요. 청양의 고등학교 학폭 사건, 4년 동안 학생이 친구들로부터, 동급생을 4년 동안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금품 갈취에 신체 결박에 강제 촬영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4년 동안 진행됐는데 모를 수가 있습니까?

차관님, 진상조사해 보셨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지금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바로 교육청하고 협력해 가지고 진행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일차적으로는 교육청이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단계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4년간이나 지속된 이러한 학교폭력이 지금까지 저희가 마련했던 많은 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학생이 피해를 받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염중하게 생각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만 매우 염중하게 보고 사안을 확인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물론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면서 각 당이 선거에 매진하느라 여러 가지 혼란을 살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을 통감하고 저도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청양고교 학폭 사건이라든지 또 최근에 제주도 선생님께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대선 이후에 교육위가 리박스쿨 가지고 이렇게 혼란질의 하자고 할 게 아니라 청양고등학교 학폭 사건 제주도 선생님 사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혼란질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고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께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리박스쿨은 우리 상임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공분을 잘 아실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있고, 서지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 리박스쿨의 두 가지 수사 대상은 자손군

이라는 댓글부대와 늘봄학교의 극우 인사들의 어떤 사상 교육 문제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필요하시다면 양 간사님들이 다음 상임위는 행안위랑 연석 상임위를 열어서 두 가지 문제를 다 한번 파헤쳐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10초만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말씀 주세요.

○서지영 위원 행안위랑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면 저는 반드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위원장 김영호 그것도 간사님들께서 합의……

○서지영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보였던 김경수 씨를 꼭 모셔 와서 이 자리에서……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중인으로 오시든지 참고인으로 오시든지 꼭 출석하셔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제안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문정복 위원 지금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경수 전 지사를 얘기하는데 사실 댓글의 원조 하면 MB 정부의 국정원 댓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김경수 지사 부를 거면 이명박 대통령도 부르고 원세훈도 부르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시지요. 그리고 귀 당에서 지금 이 문제와 같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교육위에도 계시는데 같이 중인으로 채택해서 한번 해 보시지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 어느 정도…… 도를 넘지는 말아 주시고요. 도를 넘지 마시고, 오늘은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정권은 바뀌었고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셨고 또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야당이 됐으니까, 서로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조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상임위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계시지요?

아, 백승아 위원님이시구나.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리박스쿨 댓글 조작과 극우 교육 늘봄학교 침투 의혹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리박스쿨에서 진행한 아이들 역사교육 내용 본 적 있으신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따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백승아 위원 제가 몇 가지 충격적인 장면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틀어 주세요.

(14시4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4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차관님, 리박스쿨 역사교육 내용 동의하시나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백승아 위원** 리박스쿨 역사 내용 보면 친일파 옹호하고, 우리 독립운동가의 혼신 깎아 내리고, 이승만·박정희 찬양하고, 심지어 지금 부정선거까지 옹호하고 있습니다. 딱 뉴라이트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리박스쿨이 역사관을 아이들에게 주입시켜 왔고, 교육시킨 아이들에게 윤석열 지지 연설장에서 박정희·이승만 찬양 노래까지 부르게 했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할 짓 입니까?

문제는 이런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 취직을 미끼로 해서 사람들에게 그릇된 역사관·사회관 주입시킨 뒤에 늘봄학교로 이 사람들을 보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게 하고, 심지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 깎아 내리고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댓글부대로 활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지영 위원님께서 ‘예술·과학 프로그램을 했다, 늘봄학교에서’ 이러는데요. 뉴스타파 보도 보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직접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바른 역사, 정방향의 역사를 학교에 들어가서 애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놀이체육으로도 들어가고 보드게임도 들어가고’ 이런 말을 한, 본인이 직접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학교에 들어가서, 투입되어서 역사교육을 아이들에게 한 게 확실합니다.

이런 리박스쿨 사태는 윤석열 정부가 극우 뉴라이트 정부였기 때문에 사실상 예견된 참사였어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뉴라이트 세력 단순히 방조한 것을 떠나서 임명했지요. 국가교육위원장, 3대 역사 관련 기관장에 뉴라이트 인사 임명했잖아요.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주성 이사장은 2020년이랑 2021년 사이에 리박스쿨 강사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한몸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2023년에 ‘늘봄학교 필승을 위한 모임’ 결성하고 늘봄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과 함께 교육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예산까지 요구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 계획에 마치 발이라도 맞추는 듯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늘봄학교를 갑자기 전국 확대하면서 전면 도입을 강행했지요, 저희들이 막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학교와 교육청은 충분한 검토도 없이 늘봄강사를 채용해야만 했어요. 그 결과 리박스쿨 소속 강사들이 손쉽게 학교 현장에 투입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고요 정부가 갖고 있었던 근본적 문제예요. 윤석열 정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육부가 이제 할 일은 책임 회피가 아니고요 극우 역사관 세뇌 교육의 고리를 끊본색 원 하셔야지요. 다시는 이런 역사왜곡이 교육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요. 이주호 장관이 그 핵심 책임자로 나와서 사과하고 사태의 전말에 대해 밝혀야 되는데 오늘 불출석했어요, 책임 회피하고 직무 방기하고.

저는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즉각 나와서 입장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차관님, 이주호 장관이 늘봄 예산으로 극우 보수 돌봄 강사 만들고 댓글부대 운영한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 몰랐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제가 확인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손 대표가 교육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만난 것 이외에는

개인적인 인연이나 관계는 없는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런데 교육부 정책자문위 규정을 보면요 위원은 교육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직접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손효숙 대표를 어떤 경위와 사유로 위촉하게 된 것이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제가 확인한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기 교육 정책자문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2기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을 시키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확대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백승아 위원** 시간이 없어서……

○**교육부차관 오석환** 확대하는 사이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추천받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손 대표였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이수정 교육부총리 정책자문관 추천 맞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확인된 바로는 교육계의 여러 인사들 중에서……

○**백승아 위원** 맞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자문관이 추천한 것으로는 확인했습니다.

○**백승아 위원** 이수정 교육부총리 정책자문관 추천이 맞습니다.

이주호 장관 최측근이자 돌봄 정책 비롯한 각종 정책을 지원한 이수정 교육부총리 정책자문관이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얼핏 뉴스타파 보도에도 나왔는데 손효숙 대표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장 임명장을 앞세워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손쉽게 침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주호 장관이 지대한 역할을 한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비합리적이지요.

손효숙 대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있어요. 여기가 서울교대랑 MOU 맺고 늘봄강사 파견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아무리 확인을 해 봐도 교육부나 교육청에 이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미등록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단체예요. 사단법인이라고 신고를 해 놓고 알고 보니 등록이 안 된 미등록 단체입니다. 그런데 한국늘봄연합회가 임의단체인데 사단법인이라 사칭해서 MOU를 서울교대랑 맺었다, 이것은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사기죄입니다, 사기죄. 사기죄예요.

교육부는 이 해당 사항 또한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임의단체라면 이 늘봄 예산, 국고가 개인 통장으로 지금 들어간 것이거든요. 사단법인이라고 사칭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사단법인으로 세무서에만 신고가 되어 있고 주무관청에는 미등록 된 상태로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법인등기도 지금 확인해 봤는데 안 나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알 수도 없는 이런 유령 단체가 서울교대랑 MOU를 맺고 늘봄강사를 학교에 투입시켰다, 교육부 이것 철저히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가 사실관계를……

○**백승아 위원** 확인하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아마 계속 후속 질문을 해 주실 테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수정 자문관은 유초중등 교육을 교육부장관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초중등 교육계에서 추천받은 분으로 확인했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들을 모셨는데 그 시기에는 특별한 특이 사항이 없어서 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다만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위원 위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 늘봄연합회에 직접 재원을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서울교대의 협력기관으로서 초기에 참여할 때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운영기관으로서 선정된 이후에는 직접 서울교대가 강사도 채용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봄연구회나 여기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리박스쿨에 직접적으로 재정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그건 사실관계입니다.

○**백승아 위원** 여기를 통해서 강사가 공급됐는데 예산이 하나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자문관이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장관은 모르는 일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일단은 저희가 명확하게 사실관계, 확인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위원장 김영호** 오늘 이주호 장관이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셔서 저는 굉장히 유감인데요. 지금 백승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방금 전의 현안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교육부가 정말 신뢰할 수가 없다.

지난 6월 4일부터 이 정부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된 것은 아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지만 교육부는 지금 전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뭐가 그게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실체에 대해서 교육부가 단 한번이라도 실체를 밝힌 적이 있어요? 지금 아까 현안보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언론에 나온 것 다 짜깁기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해 볼게요.

한국늘봄연합회 그것 사단법인 얘기가 나와서, 이 사단법인을 제가 추적해 보니까 어

디 가도 사단법인이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이게 사단법인이 맞냐, 맞냐, 계속 그것을 확인을 안 해 주다가 최근에, 그게 어제인가 오늘 갑자기 사단법인은 아닌데 그냥 명칭이 사단법인 한국늘봄연합회 같다.

정말 장난침니까? 사단법인은 아닌데 이 회사의 명칭이, 사단법인이 그 회사 명칭으로 들어간 것 같다 이것을, 국회 교육위원장한테 그렇게 보고를 해요? 예? 그것 장난침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자로 보니까 사단법인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지요? 사과하셔야 될 문제 아니에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지금 어떤 현안을 파헤쳤다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 밝히지도 못하면서?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교육부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데 교육부장관 취임하게 되면 누군가가 취임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실체를 밝혀 놓고, 만약에 교육부에서 은폐했든지 고의로 밝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교육 공직자들 한 분 한 분 내가 기억해서 끝까지 책임 추궁하겠습니다. 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부산진구갑 정성국 위원입니다.

리박스쿨 관련된 부분들은 질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교권 침해 사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뉴스가 또 떴어요. 오늘 뜯 게 담배 훈계에 화가 나 가지고 중학생이 교무실 복도에 소화기를 난사했다, 참 이게…… 오늘 또 나온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수원 야구 방망이 교사 폭행 사건, 제주도 교사 사망 사건 이것은 민원인과의, 집요한 민원 제기 때문이지요.

차관님, 지금 2023년에 교권 5법 통과시켰는데도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교권 5법 통과시켜 가지고 제도는 마련했고요. 마련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게 학교 현장에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사이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법안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제도를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주 사건의 경우에도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면서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특이한 특성이 있는 곳들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 그것까지 저희가 면밀하게 따져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성국 위원** 차관님 교권 5법 통과된 지,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런 변명으로 일관하기에는 교육부 책임이 큽니다. 인정하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인정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질의드릴 테니까.

교원지위법 제29조에 따르면 교원 심리 상담, 치유 지원을 위해서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이게 현재 서른 두 곳입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정성국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인력을 보면요 상담사가 총 34명, 그러면 각 보호센터에 배치되는 상담사 수가 한 명에서 세 명밖에 안 돼요.

지금 자료 띄운 것 보이시지요? 저 화면이 떴습니다, 지금. 상담사 수 보입니까? 빨간색 지금 보이시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정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정도의 인력 현황으로 실효성 있는 상담이나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역할을 확대해 가고 전문화해 가는 과정인데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하는 역할은 계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아니, 이런 상담·치료나 이런 것을 제대로 받는 것도, 상담사 숫자도 지금 얼마 안 되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서 상담받고 치료받고 하겠습니까? 이것 그냥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이야기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직접 상담을 한다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일어난 사안들을 가지고 관계되는 전문기관이나 연결을 해 가지고 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정성국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있는 상담사들도 문제가 있는 것 아시지요? 비상주 인원이 82% 그리고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정도의 상담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선생님들을 어떻게 치유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파악하고 계시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끝났는데도 지금 교육부차관을 하시는데 말로만 선생님들 지원한다고 해 놓고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는 부분들을 짚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다음에 교육활동보호센터 치료 현황 보시면…… 차관님, 그런데 외부 상담을 받으면 이게 일정 부분의 숫자가 끝나고 나면 학교장 승인이 있어야만 상담받을 수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지원하는 범위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걸로 있는데, 제한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아니 상담을 하는데 횟수 제한해 가지고, 횟수가 많아지면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제도적으로는, 지금 현실하고 그다음에 운영 사이에 저희가 고심하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무한히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요소들도 있어서 그런 일들이 실제 당사자인 선생님에게 최대한 불이익이 덜 가는 방향으로, 필요할 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운영 방식은 저희가 계속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이것도 한번 짚어 보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정성국 위원 선생님들이 상담받는데 이 숫자에 따라서 학교장한테 승인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 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누가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이것 치료받는 것 더 받게 해 달라고 승인받으러 다니고 하는 것,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시도별 전문의료기관 연계나 협력체계 현황 보시면 지금 병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전이 1개고 서울·경기·강원·충북은 구축조차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전문적인 의료제도 도입 필요한 것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교육부차관 오석환 당연히 필요한 일들이고요. 그래서 각 지역별, 이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시도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 저렇게 아직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계속 협력해서 확장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정성국 위원 이것 저희 의원실에 답변 주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이것 조치할 계획 좀 알려 주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정성국 위원 그리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2024학년도에 4000건이 좀 넘는데 이 중에 93%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면 교권침해가 거의 90% 이상 맞다는 것은, 이게 열었다 하면 다 된다는 뜻은 뭐냐 하면요,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참고 안 열리는 것들까지 치면 교권침해가 얼마나 많이 벌어진 지를 알겠지요?

특히 이번에 문제점이 뭡니까? 제주 교사 사망사건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학부모의, 민원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에 대해서 경각심 줄 수 있는 제도가 없으니까, 심하게 해 봐야 벌금 좀 때리고 이것밖에 없으니까 무작정 민원 제기하는 거예요. 교권 5법 그것 우습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왜 교육부는 끝까지 학부모 교권침해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시지요? 왜 그러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이것은 분명히 계속 고심했던 내용이고요. 법안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속 논의했던 상황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균형을 통해서 양자의, 학부모의 학습권도 보호가 되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이고 이번에 나타났던 것처럼 이렇게 지속적인 고질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작년의 법안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도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지금 학교별로 민원대응팀 구성은 99%에 가까운데 이게 현실성 없이, 민원대응팀이 있는데 왜 선생님이 뒷늦게까지 민원 전화를 받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개별적인 상황은 저희가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추가적인 민원제도 개선 방안을 후속적으로 준비 중이고 또 하나는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을 저희가 육칠 월에 개통을 해 가지고 시범 실시하고 난 다음에 9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전에 제도로 마련했던 것이 실제로 학교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성국 위원 선생님들 전부 다 학교 현장 떠나시기 전에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을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위원입니다.

저도 리박스쿨 관련해서 질의할 예정인데요. 윤석열 정권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역사교육기관 예를 들면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 국사편찬위원회의 허동현 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낙년 원장처럼 뉴라이트 인사들이 곳곳에 임명된 것으로 이야기했고 저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박스쿨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차관님, 첫 번째가 뉴라이트 세력의 조직적인 교육 현장 침투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늘봄 자격증을 미끼로 댓글공작팀을 조직했고 이들 중 일부는 실제 늘봄학교 강사로 출강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치적 쌓기에 급급해서 늘봄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했고 그 결과 교육 현장은 극우 성향 단체들이 뉴라이트의 먹잇감이 되었다는 부분들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육부 수장 이주호 장관이 직접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인물, 손효숙을 임명했다는 부분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이 잠깐 이야기할 부분 있나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고맙습니다.

먼저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을호 위원 짧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진행된 상황은, 이수정 자문관하고 그다음에 교육부하고의 관계는 개별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을호 위원 그러면 이주호 장관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국민 앞에 이런 부분들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책임자답게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참석 안 하셨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것은 불출석사유서에 저희가 명시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을호 위원 불출석사유가 뭐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현재 권한대행을 수행하면서부터는 부처 업무는 제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업무에 대해서는……

○**정을호 위원** 이 업무 책임자는 그때 당시에 차관이셨나요, 교육부장관이셨나요? 손효숙 임명할 때 책임자 누구였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물론 교육 정책자문위……

○**정을호 위원** 그러면 오셔 가지고 국민께 소상히 이야기하고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왜 안 나오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확인한 바를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사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정황으로 보면 리박스콜이 연합회를 통해서 서울교대의 협력기관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정을호 위원** 시간이 좀 지나서요 이따가 끝나고……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이라든가 언론에 보면 학부모님들이 엄청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아무런 불만 제기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들으신 거지요, 불만 제기가 없었다는 부분들이?

○**교육부차관 오석환** 구체적인 민원 제기를 말씀드립니다. 10개 학교에 저희가 현장실사를 나갔고요……

○**정을호 위원** 아니, 공공교육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무 문제 제기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은 무책임한 발언 아니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문제 제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해당하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돼 있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를 우선 질문을 주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학교들까지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온라인 조사도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손효숙 씨가 발언한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차관님, 영상을 보시면요 손 대표는 거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체험학습이라든가 영화관람, 봉사활동 점수를 미끼로 해 가지고 학생을 끌어들이는 방식 등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자자체와 교육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손 놓고 있었다는 부분밖에 없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마는 현재까지 본인이 얘기한 것하고 실제로 실행한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전수조사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선적으로는 사

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리박스쿨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리박스쿨과 동일한 주소지를 공유하고 있는 유사한 뉴라이트 성향 단체들이 교육계에 판치고 있다는 건데요, 협력단체 관계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리박스쿨과 비슷한 뉴라이트 성향을 공유하는 단체인데요. 여기에서 저는 대한민국교원조합 관련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교조는 지난해 9월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바로 이 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 책인데 이 책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책에 뉴라이트 9대 정의라고 보이는데 보시면, 다음 영상 보시지요.

뉴라이트의 9대 정의 중 7개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을 전국대통령이라고 하는 단체, 전국철이라고 하는 단체 이런 부분, 9개 중에서 7개에 해당하는 이런 책을 지금 검정…… 전형적인 뉴라이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검인정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검인정교과서로 추진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검인정교과서 추진했다는 부분이고 더욱 문제인 것은 검인정교과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북 콘서트를 했습니다. 북 콘서트를 했는데 부산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급했다는 부분이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서 교육청이라든가 교육부에서 아시는 바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문제가 제기돼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교원노조는 노동조합이고요.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하는 지원의 일부로서 재정 지원이 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재정 지원한 범위 내에서 실제로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부산교육청이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정을호 위원 아니, 국민 혈세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전혀 점검하지 않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아닙니다. 지방보조금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조사하고 점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 사이에 만들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을호 위원 혈세가 이런 뉴라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낭비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사할 의향 있으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보조금 지원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부산교육청 건과 관련해서 부산교육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이 건과 관련돼 있는 추가적인 연관된 사실들이 있으면 저희는 보조금 관리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리하고, 그것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정을호 위원 환수할 의향도 있으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확인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

습니다.

○정을호 위원 이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정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위원님입니다.

먼저 손효숙 이분은 리박스쿨 대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한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리고 이수정 교육부총리 자문관이 손효숙을 추천했다 이렇게 밝혀진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할 때 다수의 추천을 하고 그중에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손 대표에 대해서는 자문관이 추천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확인을 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데 이런 역사왜곡, 물론 댓글조작은 선거법이나 거기기 때문에 경찰이나 거기서 조사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정작 손효숙·이수정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어떤 조사를 했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손효숙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개인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학교에 대한 조사와 전수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항 중에서 위법행위나 부당한 행위가 있다고 그러면 관련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수정 자문관은 그냥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역할에서 여러 다수 추천자 중에 한 사람을 추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상황은 제가 직접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추천을 한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자문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추천받는다고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자문관이 유초중등 교육을 장관 자문을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받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추천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관련이 있어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래서 아까 말씀.....

○김문수 위원 추천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교육부차관 오석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들을 추천을 받았고 추천을 받은 분들 중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특이 사항이 없어서 확인하지 못한 결과 추천되었는데 절차는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데 두 분 다, 한 분은 6월 1일 날 위원직을 사임하고 그다음에 이수정 자문관도 6월 3일 날 그만두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6월 5일 날 행정적으로는 복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특히 자문관 같은 경우는 공직자인데, 공무원 신분 아닙니까? 공무원 신

분에 문제가 발생되면 조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사직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자문관은 지위가 민간 파견 전문가입니다. 대학에 소속을 두고 있는 민간 파견 전문가고요. 지금 이게 위법한 상황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래 사실 대학으로 복귀하는 절차는 실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전에 진행되고 있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김문수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어쨌든 공직자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이렇게 사직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하는 것도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보면 대한민국에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양을 갖췄다라든가 또 5·18은 완전히 진짜 공산 폭동이었다. 또 바른 역사, 정방향의 역사를 학교에 들어가서 애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다. 물론 아까 다 이미 나온 이런, 아예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5·18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침투를 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교육부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교육부정책자문위의 규정에도 보면 교육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대통령령에도 자문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손효숙은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이게 추천된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한 거를 전제로 해서 추천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규정에 있는 자격조차도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천이 됐는데 교육부에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늘봄학교를 갑자기 1년을 앞당겨서 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23년도에 기반 조성을 하고 24년도에 단계적으로 하겠다 하고 그리고 25년부터 전국 확대를 하기로 원래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느닷없이 23년 8월 9일 날 천안불당초에 방문해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늘봄학교 전국 확산 시기를 당초 25년에서 1년 앞당기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늘봄을 저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돌봄 대기가 굉장히 큰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조기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문수 위원**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 듣도록 하고.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장관이 1년 앞당기겠다고 하기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원의 한 초등학교의 늘봄학교를 방문하고,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여기서 하루에 2000만 원짜리 이벤트 행사를 하고 갔다는 걸 한번 제가 주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걸 하고 나서 그다음 달에 바로 한 달 앞당기자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관련성이 매우 있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표 한번 보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7월 3일 늘봄학교 현장 방문, 그리고 한 달 뒤 이주호 부총리가 8월 9일 날 1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하고, 그다음에 한 달 뒤에 바로 이수정 교수 가 부총리 자문관으로 임명되고,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손효숙 대표를 정책 자문관으로 위촉합니다.

이런 일련의 정황들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부총리가 학교에 이런 왜곡된 역사관을 전파시킬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서둘러서 하려고 갑자기 1년 앞당기는 이런 이상한 출속 행정을 했던 거 아닌가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심이 강하게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 부분은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 입장에서 명확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늘봄학교는 국정과제입니다. 국정과제에 따라서 진행했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돌봄을 담당했던 국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 사실 돌봄과 관련돼 있는 영역들은 모두가 다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요. 그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년, 제가 알았던 가장 큰 아픔은 돌봄 대기하고 그다음에 조기 하교에 따른 학생 보호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최대한 정부가 모든 힘을 합해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노력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편향된 교육을 가르치는 장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는 어른들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고 그건 이미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명확하게 사실관계 확인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이따가 더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이상한 행정들이 그런 의혹을 안 가질 수 없는 상황이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좀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차관님, 제가 자꾸 의구심을 보이는 게요 리박스 쿨 오늘 긴급현안 질의잖아요. 가장 핵심 인물이 손효숙 씨잖아요. 그런데 손효숙을 정책 자문위원으로 추천한 배경조차도 아직도 국민에게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육부가 지금 이 문제를 국민들이 정말 굉장히 격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성과 노력을 통해서 이 실체를 정말 밝힌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다시 한번 우리 공직자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공직자들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국민과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충성하세요. 당장 태도 바꾸십시오. 실체를 밝혀 주셔야지 정상화되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부는 바꿔더라도 교육부는 정상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좀 태도를 확실히 바꿔 주십시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이 사건이 불거진 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차관님?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런데 또 공교롭게 선거 중이라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씀을 들으면,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았던 건데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 내가 바빠서 애를 맡겼는데 그 애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육, 이런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실제로 부모들은 늘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보다 더 좋은 환경 만들어 주고 싶고, 그런데 본인이 일하고 돈 벌어야 하니까 그 아이가 혹여라도 자기 때문에 뭔가 나쁘게 될까 봐 그런 걸 늘 우려하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래서 사실은 돌봄교실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였고요.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추진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민간 자격증이 교육부에 등록된 산하기관에서 교육에 관련된 민간 자격증만 해도 몇만 개가 되던데.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름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름이 연합회 그러면 굉장히, 사단법인 연합회면 그것과 관련된 단체들이 수십 개가 있거나 엄청 있고 거기서 뭔가 의견을 같이 공유해서 단체를 만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연구원이라면 연구원도 굉장히 전문적인 자격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뭔가 자격증을 만들어 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차관님 대충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진선미 위원** 리박스쿨이라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대표가 가지고 있는 단체만 해도 밝혀진 것만 대여섯 개?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진선미 위원** 그렇지요, 본인이 대표가 되거나 이사장이 되거나.

그런데 이거 보세요.

서울교대에서 지금 한국돌봄교육연합회 명의로 이렇게 협력 제안해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돌봄교육연합회를 저희가 찾아보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리박스쿨이라는 대표가 이걸 통해서 갔을까? 연합회 대표 이름이 김은총이라고 돼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력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교대의 협력기관으로 가면 적어도 그 대표의 이력이나 전문 이력이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 찾다 보니까 이 김은총이라는 사람이 손효숙 씨의 딸이에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그냥 이름만 갖다가 올려 놓은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사람의 이력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제가 겨우 찾은 게 이 대표의 남편인 유튜브 계정을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사진으로 다 올려 가지고. 그런데 이름이 같아서 또 동명이인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인정해서 딸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들의 교육은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식적인 걸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하려고 용역을 따로 했고 그 용역 안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공공기관성이 담보돼야 될 것 같다, 이런 걸 맡은 게. 그냥民間 위탁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조사까지 했더라고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맞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 정부에서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심지어는 1년을 당겨 가지고 이걸 추진했고 그러고는 심지어 대통령도 이것을 계속 확대하라고 독려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지금 안 오신 이주호 총리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엄청나게 강사들이 확보됐다’ 이렇게 브리핑까지 하셨더라고요. 이 안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리박스쿨에서 댓글 이거 달아 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자격증을 주겠다고 한 거고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 안에 얼마나 들어가 있을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전수조사 결과가 13일에 나온다면서요?

그런데 일단 확인된 것만도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문을 열어준 거다. 확인되지 않고 어떤 또 다른 사적인 사사로운 의도, 아까 얘기했지만 선거에도움이 될 거다, 애들이 크니까 유권자를 확보하는 수준이다. 정치적 목적이든 아까 얘기한 굴절된 왜곡된 역사의식을 불어넣기 위한 거든 이런 사사로운 어쩌면 사악한 그런 의도들을 가진 강사들이 대거 진입할 수 있는 문을 교육부에서 열어줬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아니, 연합회라고 하면 그렇게 몇 개의 단체라도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그 연합회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름도 없고 그냥 손효숙이라는 이 사람의, 우체국장 하셨다는 이분의 경력의, 딸이라고요, 딸. 그 사람이 대표로 있는 이 연합회가 공식적으로 서울교대랑 협력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열 군데 넣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차관님 경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그리고 다 연결되는 건데 손효숙이라는 대표님이 계속 자기 경력을 관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교육부의 공식적인 자문위원, 저도 자문위원 선임해 봤지만 공식적으로 대개 이력을 다 확인하지요. 그리고 그거에 중간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교육에 관해서, 리박스쿨이라는 그 활동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렇게 벼젓이 뒤에다가 자문위원회 위원이라는 거, 이건 100명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지요. 교육부에서 공인해 준 거예요. 이런 걸 달고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지금 도대체 국민들한테 아니면 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학부모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제가 잠깐……

○**진선미 위원** 예.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님 말씀대로 늘봄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면서 해야 될 일이 질 관리인데 질 관리가 강사 관리하고 프로그램 관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위탁업체 그다음에 일반 강사보다 좀 더 질이 관리된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던 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이렇게 전문기관을 통해서 운영하는 방식인데 거기는 대학이나 공공기관이 지원을 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 부처청은 저희가 정부 부처청이 이미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질 관리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확대해 가지고 지금 늘봄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던 거고요.

다만 이번에 이 과정에서 서울교대가 운영기관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곳의 협약기관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늘봄연합회에 대한 검증이 충실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실관계를 계속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서면조사가 이루어졌고요. 후속적으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단법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최근까지 확인을 해 본 결과 국세청까지 세무서까지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러한 지위를 가지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확인되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서울교대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선미 위원** 이것 얼마나 엉터리예요. 연합회도 아닌데 연합회라는 이름 넣고 연구원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계속 속이고 있는 이런 단체 이름을 저는 관리를 엄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연합회라는 단체 이름을 쓰려면 어느 정도의 조건이 있어야 하고 이런 걸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거예요.

이따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말씀처럼 아까 한국늘봄연합회 사단법인 문제는 허가를 냈으면 교육부에서 허가를 냈는데 위원장실에서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확인을 안 해 주셨다가 어저께서야 알려 줬으니까 제가 의심을 했던 거고요.

다만 사단법인이라는 그것을 이용해서 손효숙·김은총 이 두 모녀가 사실 서울교대까지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교육부와 교대가 다 사기당한 거거든요, 이 모녀한테. 그러면 교육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위해서는 고발 조치해야 됩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 건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장 김영호**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면 고발하시겠어요, 교육부가?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와 관련되는 조치가 고발이 필요한 사항이면 고발도 하고 하는 조치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 사기를 친 거잖아요. 사단법인이 아닌데 사단법인이라고 교대와

계약을 하고 교육부를 속였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사기죄로 고발 조치하셔야지요. 그래야지 교육부가 실수를 한 것을 인정하는 거지, 이게 고의적으로 그쪽 극우단체랑 결탁했다라는 그런 오해를 안 사려면 할 것은 명확하게 고발 조치하셔서 선을 딱 갈라 주셔야지 국민들이 교육부를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명확하게 사실관계 조사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발 조치도 검토를 하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둔 김대식입니다.

차관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고 오늘이 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처음 열리는 교육위원회잖아요. 정책의 책임자는 바뀌어도 교육의 책임은 결코 바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우리 공무원들, 여기 계신 분들 정무직 빼놓고는 다 어떻게 보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교육정책이 돼야 하고 백년대계 정책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지금 리박스쿨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각지대.

그리고 존경하는 김준혁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마는 정권이 바뀐다 해서 역사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국가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공한 역사도 역사고 실패한 역사도 역사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리박스쿨도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단법인하고 그냥 리박스쿨 일개 단체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것 아닙니까? 사단법인은 뭔가 법적인 그게 있는 거고 리박스쿨 같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부도 사기당했고 서울교육청도 사기당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을 위원장이 먼저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것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정권 교체이고, 차관님도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되신 분이고, 또 계속하실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에 교육공무원 고위급들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물 샐 틈 없이 해야 된다. 교육 이 자체가 흔들리면 안 돼요, 역사도 마찬가지고.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김대식 위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리박스쿨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항 하나를 좀 하겠습니다.

대학 있잖아요. 대학은 국가 혁신역량의 최전선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수많은 첨단산업 특히 AI 데이터센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학의 연구기관이 이것을 충분하게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AI 데이터센터 그러면 두 가지거든요, 전기와 물. 이게 물 먹는 하마가

아니고 전기 먹는 하마예요.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전국 대학이 신청한 전력 증설 18건 중에서 실제 공급이 완료된 것은 딱 3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김대식 위원** 17%에 불과한데 신청부터 공급까지의 기간도 최장 1010일이 걸려요. 이게 3년이 걸린다는 소리인데 공급 불가 판정을 받는 사례는 모두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고 변전소 용량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차관님, 이것 좀 파악을 하셨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제가 직접 그 자료는 못 봤습니다마는 그 문제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가지고 계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현재 대학이 AI 연구를 위해서 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김대식 위원** 평가 자체에만 수개월이 소요되고 이후에도 비용 부담이, 대학 측에 과도하게 지금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대학에서 고전력 AI 연구시설을 구축하는데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을 예외 절차를 좀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전력 공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년이 걸려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부는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개선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AI에서 가장 일차적인 요인이 에너지 요인이고요. 에너지 요인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 배분 방식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새 정부에서 AI 정부, 그러니까 AI를 국정과제로 지향해 나가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 주신 대로 산자부가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연구단체로서의 대학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가 공동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단순하게 우리 부처만의 일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저희가 산자부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융합이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데이터센터 구축하고 이런 것은 산자부인데 거기에서 연구 이런 부분은 교육부에 또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연구비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시설은 대학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면 이게 서로가 안 맞아요. 그러면 빅5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 있어, 그 외의 대학은 국립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차관님이 좀 충분하게 산자부하고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융합이고 그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매우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BK21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의 여러 가지 항목 있잖아요. 인프라 구축, 접근성 이런 부분은 좀 속도감 있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현장 중심, 우문현답 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 세종에 계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직접 한번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실효성 아닙니까?

지금은 모든 패러다임이 다 바뀌었어요. 현장 중심으로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정책을 펴는 거예요. 교통체계 누가 잘 압니까? 국토부에서 잘 압니까? 택시기사가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중심과 이론과 현장이 겸비되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된다. 저는 거기에 특히나 교육이 더 그렇게 접근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것을 차관님 이하 모든 고위공직자들에게 강력히 부탁을 드리고 또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께서 저희 많이 지원해 주신 덕택에 RISE 체계나 이거 했던 게 결국은 중앙정부인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고민들을 교육부가 다시 문제를 풀어 주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 저희 교육부 직원들이 지방에 나가 가지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가지고 와서 다시 우리 교육부에서는 제가 중심이 돼서 글로벌 혁신포럼도 하고 해 가지고 규제 완화에 관한 다양한 방식의 토론들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차관님, 오랜만입니다.

최근에 리박스쿨 사태를 보면서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도대체 이들은 어디까지 일을 벌였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특히 이주호 장관 재임 시기에 형식만 달라졌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여러 번 사태가 벌어졌더라고요. 다시 한번 오늘 장관님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하게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절대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밝혀 두는 바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뉴라이트 사관 관련이거든요. 이게 이주호 장관 재임 시기에 있었던 사안인데 2022년 11월부터 재임했기 때문에, 죽 살펴보니까 한국학력평가원에서 역사교과서 검정을 신청했지요, 고등학교 한국사를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는 지금 검정이 취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검정이 취소되어 있다는 것은 그전에 국회에서 야당 위원들이 굉장히 중심이 되어서 이것을 국회 의결로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시면 역사기관장이 뉴라이트 학자군 역사기관장 임명을 포함해서 2023년도부터 그런 기관장 임명이 있었고 또 24년 이후에 방과후교육에서 이런 극우 단체의 늘봄학교 강사 파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영상을 틀어 보여 주시면, 제가 그전에도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에 대해서 여러 번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주호 장관님 그 반응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렇게 지속적으로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차관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가 여러 가지 논쟁 상황에서 규정된 절차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보조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지만 보십시오. 지금 현재 검정을 취소하라고 하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고요, 최소한의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검정을 신청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돌아보면 평가원과 교육부는 능력이 좀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으로 그야말로 그냥 지나쳐 버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인사 조치도 전혀 하고 있지 않은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님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원장 자격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위 있는 기관이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하고……

○**강경숙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는 적정하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안 보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리박스쿨 사태는 사실상 예견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죽 그전의 이력을 보니까 장관 차관 기조실장 책임교육실장,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모두 과거 국정교과서라든지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된 인물이었어요.

사실상 이것이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라든지 역사기관장이라든지 리박스쿨 사건과 연이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게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전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다 본인들도 있으실 거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그런 일들에 계속 개입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 시켜 드립니다.

지금은 민간자격 시스템과 관련되는 말씀인데요.

보시면 정권이나 어떤 장관 취향에 맞춰서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탈이 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건은 늘봄학교 물량을 최대한 빨리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방임적 구조로 설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홍보 포스터를 보시면 여기에 늘봄 프로그램 강사자격증 실습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

다. 늘봄 프로그램에 강사 자격이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인가하는?

○**교육부차관 오석환**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없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없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십시오.

‘교육부 인가 자격증을 수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거짓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교육부에서 했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자격 관련돼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기관인 직능원하고 조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직능원에서는 사실 민간자격을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민간자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늘봄과 관련된 것은 사실 현 정부에 굉장히 시그니처 정책이었는데 그러면 거기와 관련된 자격만이라도 꼼꼼하게 살펴보셨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구멍이 벌어지는데 지금 와서 이것 직능원의 문제다, 거기서 자격관리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책임이 너무 없는 발언이신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책임 회피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일단 자격제도 영역은 민간 영역의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의 자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등록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등록제를 취할 때 각 분야별로 자격이 만들어지면 시그널이 만들어지는데 이 경우에 늘봄 정책이나 정책을 악용을 해 가지고 거짓 광고하는 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악용을 한 건 맞는데 그래서 악용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늘봄 프로그램에 관한 것은 사실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셨던 정책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것을 지도감독을 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로 답변이 온 거예요. 그 앞 슬라이드 보시면 ‘그냥 확인할 예정이다’.

그다음도 한번 봐 주세요.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도감독한 내용을 보니까 5년간에 25건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여기 사유도 보시면 거짓 광고라든지 과장 광고다, 그것이 시정명령 사유에 불과한 것이에요. 솜방망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민간자격이고 아무리 등록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교육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격을 이 정도로, 5년에 25건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너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제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책 분야의 민간자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검토를 했어야 합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무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자격관리자에게 법률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렇게 시정명령이나, 그러니까 사전에 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사후에라도 시정명령이라든지 등록취소 등에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지금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보통 30시간이나 60시간이라 하더라도 주말 하루만 딱 날 잡아 가지고 자격증 수업을 하고 자격증을 남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교육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 게다가 이렇게 늘봄과 관련이 있는 것들은 상당히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면, 아까는 많이 다루긴 했는데 정책자문위원회 관련된 것인데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 정책자문으로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진짜 정말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했는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꼼꼼하게 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김민전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질의를 들으면서 야당 위원님들이 주로 주장하시는 것은 이 늘봄학교가 확대된 것이 리박스쿨 때문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것으로 일부 들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침소봉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그동안에 출강을 했는가를 보니 11명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소위 강사료라는 게 900만 원 정도인데, 전체 늘봄학교 교사가 몇 분이나 되셨는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저희가 늘봄학교 전체 참여하고 있는 것은 1만 1000명 정도, 제가 확인해 갖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지금 만약에 1만 단위로 가신다라고 하면 이 11명의 영향력이 뭐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앞에서 서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도 주로 과학 관련된 프로그램이어서 이게 역사교육과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역사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이 정치적 중립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동의를 하고 있고 어느 역사왜곡이나 혹은 또 어느 정파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학교 현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 국정감사 때에도 제가 광주교육청 감사를 가서 민족문제연구소에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민족문제연구소는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던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광주교육청에서 민주시민 역사교육으로 2016년부터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어느 교육청이든 교육부든 할 것 없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단체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울산 전교조가 교육청 메일을 이용해서 소위 탄핵 시위에 나가자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더니 ‘지금 감사원 감사 중이다’ 말씀하셨는데요. 감사원 결과는 나왔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제가 숫자를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 방과후 강사 수는 지금 1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김민전 위원 12만 3000명 중에 11명이 출강했다라고 하는 숫자가 이게 많다고 볼 수 있는 숫자인지 또 학생들의 교육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숫자인지 이 부분은 상당히 의심이 되는 숫자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 크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원칙은 학교 현장은 정치적 중립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에서 야당 위원님들도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 교사의 참 안타까운 사건 얘기를 또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게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서이초 사건 이후에 상당히 많은 법안들을 바꿨습니다. 대표적으로 초·중등교육법을 바꿔서 민원 처리의 책임은 학교장이 갖는다 이렇게 법을 바꾸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많은 교사분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뭐가 좀 변화가 있나?’ 물었더니 ‘변화가 없다’라는 대답을 주로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나서도 보니까 역시 변화는 없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 교육청에서 발간한 민원응대 안내서라고 하는 책자를 보니까 ‘학교 민원의 처리 기본방향’ 이래서 ‘학교장은 민원 처리의 책임자입니다. 학교 민원은 기관 차원에서 함께 대응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의 책임이 아니라 기관이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 니다마는 우리가 제주도 사건에서도 보시다시피 교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학부모, 누나와의 관계가 주고받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어떻게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과정들, 고뇌의 과정들이 있었고 결국 이게 교육청에 알려졌을 때 주의를 받은 것은 교사였습니다. 같이 민원을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가 나서고 학교장이 나서고 교육청이 같이 나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사에게 주의를 줬다 이것을 민원인에게 알려준 것으로 지금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입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주는 제가 그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바로 가서 교육감님하고 같이 그 상황을 점검하고 유가족들을 만나 뵈면서 같이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 주시는 대로 저희가 기본적인 제도는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계 특수한 영역에서 작동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신 초·중등교육법을 후속적인 조치로서 민원 개선 방안을 저희가 수립해 가지고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시스템으로는 민원 시스템을 제도로 돼 있는 것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준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목표로 저희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준비해 왔던 내용들이 선생님들에게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제도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에서는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제주 교사분의 경우에는 사립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국립학교 교사분과 또 처리과정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유족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나서고 또 교육부가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진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그다음에 이 리박스쿨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한편에 있어서는 역사 해석의 문제 이 부분은 역사학자분께서도 계시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역사 해석은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할 정도로 역사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재해석되기 때문에 어느 한편만 놓고 이것을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자손단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무슨 댓글부대를 운영한 것처럼 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민주주의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다양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 서울 중구성동을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차관님, 제가 쭉 얘기를 들어 보니까 손효숙 대표에 대해서는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거지요, 교육부 차원에서는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책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한 것 이외에는 직접 내용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서울교대를 중심으로 한 협력기관으로 참여했을 때 참여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러한 적정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했던 사항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 부분들은 추가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차관님은 이렇게 왜 손효숙 대표가, 언론도 그렇고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손효숙 대표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거론한다고 보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 교육적 영역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교육이 편향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이면서……

○**박성준 위원**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교육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니까 극우 이념을 교육하는 장본인이 된 거지요, 손효숙 대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적 가치, 민주주의 가치라든가 한국 역사의 정통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극우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이념적 잣대에 의한 어린아이들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 중심인물이 손효숙 대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효숙 대표가 정치적 영향력을 대단했던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기본이력을 보면 교육 정책자문위원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이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교육전문가도 아니고. 또 행사하는 것들을 보면 서울시도 대대적으로 지원을 했던 것 같고, 또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와의 관련성도 지금 상당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정치적 인맥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영향력이 커졌을까요? 그건 바로 극우 이념을 통한 자신들의 진영을 확보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손효숙 대표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리박스쿨과 관련된 현안질의를 했을 경우에는 차관님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손효숙 대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관계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들에게 브리핑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오늘 진선미 위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손효숙 대표가 관련된 늘봄학교에 강사 자격증을 하는데, 그 딸입니까? 딸이 대표로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한국늘봄연합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만의 리그전을 펼치고 있었던 거고, 그것은 누가 보호를 해 줬느냐? 정치적 뒷배가 있었던 것이지요. 정치적 뒷배가 있는 건데 그 뒷배가 왜 작용을 했을까? 그것은 리박스쿨이, 우리가 이름도 참 생소한데 여론 댓글 조작을 하는 전위부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손군이라고 하는.

자유손가락군대 들어보셨어요, 차관님?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말은 들어 봤습니다.

○**박성준 위원** 저는 이 자유손가락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보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차관님도 역사에 대해서 관심 많고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주의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의 생각과 비슷해요.

이 전체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 갈라치기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요. 항상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강조합니다,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동원체제를 형성해요. 그래서 나치즘 같은 경우는 인종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강요하고 거기에서 국가동원체제라고 하는 돌격대를 만드는 것 아닌가요, 나치즘 돌격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전체주의는 비밀경찰을 항상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이 건전한 사고를 방해하기 위해서 언론을 통제하는 것들이지요. 이 전체주의의

기본적 틀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걸 보면 윤석열 정권에서 특징이 뭐였냐면 이 데올로기적인 갈라치기를 했어요, 공산전체주의를 어느 날 막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극우 유튜버를 동원합니다. 그게 국가동원시스템이지요.

그러면서 뭐냐하면 사실은 국가권력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검찰을 도구화했던 거고 언론을 통제하는 이러한 시스템의 전체주의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이 윤석열 정권의 특징이었어요. 그것이 내란으로 이어지고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더 하나 나가서 나치즘 전체주의의 특징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이념 교육을 해요.

그래서 나치의 히틀러는 뭐냐면 10대 아이들에 대한 유겐트(jugend)라고 해서 인종주의를 주입하는 교육을 한다든가 독재화를 더욱 우상화한다든가 그리고 갈라치기를 하고, 이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상 교육을 하는 것이 기본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원래 독재국가들의 큰 특징들은 바로 이념 교육과 극우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틈새시장이 있었던 것이 바로 손효숙 대표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갈라치기였는데 이 갈라치기에 있어서의 전선을 어디서 형성을 하느냐? 그게 바로 극우 유튜버고 댓글부대예요. 그 댓글부대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등장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댓글부대의 터전이 바로 리박스쿨이었고 인사동에 있는 하나로빌딩 802호에 이념적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을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바로 학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까 교육 현장에 몇 명이 됐다 안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시도를 한 겁니다.

차관님, 그런데 이 손효숙이라는 사람이 누구랑 더 연결돼 있느냐? 정치권과 연관돼 있고 극우단체들하고 다 연관돼 있던 거예요. 이것 굉장히 위험한 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서 세계 10대 강국을 이루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상적 자유화예요. 사상을 자유화하고 건전한 토론을 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이념적 잣대를 제공하지 않는 건전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이 손효숙이란 대표는 그러한 역작용을 이용한 갈라치기 교육하고 극우 이념을 교육하고 여론조작을 하고 이런 전위부대를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보니까 교육부차관께서 전혀 이 사람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검토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인 것인지요. 이게 이제 수사가 분명히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늘봄과 연계되어 있는 영역에 있어서 지금 제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늘봄의 영역이 10명이냐 20명이냐 1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 이미 늘봄교육이라고 하는 하나의 터전을 가지고 시도를 해서 강사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하면 극우 이념 교육에 의한 전체주의 교육의 토대가 된 겁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엄중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족끼리 운영했던 거 아니에요. 이 연관성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이미 해 가지고 와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차관으로서, 지금 우리 위원님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손효숙에 대해서 저희보다도 전혀 조사가 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손효숙에 관련된 부분, 교육부와 연관된 부분, 교대와 왜 체결이 됐고 왜 이런 것들이 다 됐는지, 교육 정책자문위원이 됐는지, 여기에서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인가를 해 줬냐? 교육부가 인가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야지요, 당연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에요, 이거 리박스쿨은요. 히틀러의 유겐트랑 비슷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동영상 하나 재생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지요? 이게 리박스쿨 주니어 역사교실의 강사인 일명 자손군이라고 하는 그 강사가 여기 와서 이런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고, 아마 자손군으로 활동을 하면서 늘봄교실 강사를 취득을 했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 강사는 어느 학교의 늘봄교실에 가 있는지 아직 몰라요. 파악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전에 백승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첫 번째 남자 강사도 사실은 파악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늘봄강사로 어딘가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부가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11명이다, 만 몇천 명에 11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전수조사를 13일까지 하신다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문정복 위원 13일까지 하신다 하더라도 실제 밝혀지지 않은 강사들은 굉장히 수가 많을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내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교대하고 리박스쿨하고 업무 체결한 업무체결서 보시면, 아까 진선미 위원님께서 김은총이라는 대표가 실제로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딸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이미 이것은 밝혀진 사실인 거고.

저는 여기에 센터장으로 있는 임미인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사인을 했지만 실제로 이분이 사인한 거라는, 이분이 결정했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교육대학교의 장신호 총장이 결정했다라는 게 지금 정설인 거거든요.

장신호 총장이 누군지 아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문정복 위원 김태준 상임위원님, 장신호 총장이 누군지 아시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예.

○**문정복 위원** 국교위에서 뭐를 맡고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비상임위원으로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비상임위원으로 계시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예.

○**문정복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요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저희가 대한민국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라고 만들어 놓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정치 중립적인 이 기관이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우편향적이고 그런 인사들이 비상임 이사로 다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번 리박스쿨 사태에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리박스쿨과 관계 있는 사람이 늘봄교육연합회는 김은총이라고 손효숙의 자녀고, 김은총과 서울교대 총장이 서로 협력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자신들의 카르텔인 거예요.

보면 리박스쿨에 김주성이라는 국교위 비상임위원이 있지요. 아시지요, 김태준 상임위원님?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예.

○**문정복 위원** 아시지요? 이분이 전직 뭐였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전직 교원대 총장……

○**문정복 위원** 교원대 총장이셨어요. 그리고 교원대 총장이면서 이렇게 교육과 관련된 연관들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연취현 변호사는 누굽니까? 대한민국교원조합의 자문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국교위 비상임위원이시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예.

○**문정복 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우익에 관련된 사람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실제로 늘봄학교에 리박스쿨과 연계해서 아주 집요하게 들어갔던 거예요. 소위 말하는 먹잇감을 발견하고 그 먹잇감을 쟁취해 내기 위해서 굉장히 서로 협력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저는 오늘 이배용 위원장님이 나오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세 분의 비상임위원에 대해서 당연히 국교위에서 해임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임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안 하셨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김태준** 아직까지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교위 차원에서는 논의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것 보세요.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을 국교위 차원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김주성 비상임위원이 2025년도 6월 4일 날 리박스쿨 가서 강연을 하는데 무슨 강연을 했는지 아십니까? 좌파는 사람도 죽인다예요. 거기의 자세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좌파는 사람까지 죽이지 않느냐. 전태일도 죽고 이한열도 죽고 많이 떨어져서 죽고. 애들은 죽음의 미학이 굉장히 미학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좌파는 마치 아이들 죽음을 조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고 그렇게 하는데 국교위는 몰랐던 거예요.

더군다나 연취현 변호사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어떤지는 아시지요? 대한민국교원조합의 자문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이번에 서부지법 사태 난동이 일어났을 때 법원에서 이들에게 중형을 내리지 않습니까? 1년에서 1년 6개월. 그런데 이분이 딱 성명서를 발표해요. 너무 편파적이다.

아니, 그러면 법원에 난입해서 난동 부린 게 이 정도의 죄도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정도의 시각을 갖고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국교위의 비상임위원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 이배용 위원장님 오셨으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사임 받아냈을 건데 안 오셔서 제가 참 유감이고요.

두 분의 상임위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이 세 분의 국교위 비상임위원 사임을 받아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어제 오후에 잠깐 상임 셋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위원장이 나올 줄 알고, 여기 가면 현안질의에서 저 세 분 얘기가 나올 텐데 국교위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사무처에서 저 세 분의, 어떻든 지금 국교위 차원에서는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경위 파악을 하기로까지는 어제 얘기가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정복 위원** 빨리 정리하셔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국가교육위원으로서 이사 역할을 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해임하시는 게 방법일 거라고 저는 주문 드립니다.

다음번 질문할게요.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정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서울 마포갑 국회의원 조정훈입니다.

열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를 꼼꼼히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놀랐고 걱정이 됩니다. 전혀 알고 있지 못했지만 늘봄학교의 부실 그리고 상당히 편향적인 프로그램이 우리 교육현장에 스며들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깊은 우려를 표시합니다. 이제는 야당 간사지만 얼마 전까지 여당 간사로서 저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국민과 학부모 여러분들께 깊이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여러 가지 특히 세 가지 조치를 이제는 야당이지만 요청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모든 강사 늘봄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6월 13일 날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인력과 그 교육 내용, 콘텐츠가 발견되면 즉각 인력과 콘텐츠들을 교체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 실시간 공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늘봄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받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개인정보법에 제한이 없다면 그 강사의 이력이라 그럴까요 어떤 강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공개하면 이런 문제는 상당히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무겁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물론 제가 이 단체와 전혀 어떤 관련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당 전간사로서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어 갑니다. 그것은 교육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실은 문제가 된 그 기자회견은 지난주에 여러 대선 기간 중에 전교조와 민주당이 교사의 정치 참여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는 것에 대한 저희 반대 목소리의 일환이었습니다. 그건 사실관계니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떻게 펼쳐 나갈지 모르지만 다들 동의하시는 것이 교실 내에서만큼은, 교실 내에서만큼은 좌도 우도 편향적인 정치 교육을 너무 말랑말랑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 김준혁 위원님과 김대식 위원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강조하셨지만 역사가 이렇게 5년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치 다른 역사인 것처럼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뿐만 아니라 정치가 우리 사회에 안 스며든 곳이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 학생들이 교육받는 교실 안에서만큼은 정치적인 입장이 아이들에게로부터 지켜져야 된다라는 그 생각만큼은 더 강하게 제가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늘봄교육인데요. 늘봄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지요, 이제는. 여러 교육 공약 중에 제일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3시까지 교육시키겠다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얘기가 아마 제가 판단한 바로는 꽤 학부모 커뮤니티에 큰 반향을 좋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게 늘봄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향되고 부실한 교육이 스며들어 가는 거 막아야겠지만 이 자체가 늘봄교육을 중단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재력과 교육열이 뛰어난 많은 학부모를 둔 자녀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그전부터 오랜 시간 교육을 받는 게 교육현장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봄 교육을 발전시키는 방향이 그리고 보완시키는 방향이 맞지 늘봄교육을 중단하는 방향은 새 정부에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걱정하셨을 학부모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정훈 간사님 송구하다는 말씀을 지금 몇 차례나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 긴급현안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늘봄학교에 대한, 극우 교사들의 침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또 이 분노를 조금이라도 해결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 당사자인 이주호 교육부장관 또 이수정 전 교육정책자문관, 손효숙 자문위원, 이배용 위원장님 모두가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과연 학부모님들 또 국민들이 오늘 상임위를 보면서 정말 치밀었던 분노가 풀리셨을

까, 또 늘봄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을까 이런 걱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학부모님들이나 또 학생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도 간단히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사실 손효숙 자문위원보다 더, 손효숙 자문위원을 직접 추천한 이수정 교수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언론에서는 이수정 교수가 빠져 나와 있거든요. 사실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 아까 차관님께서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주호 장관과 이수정 교수의 사이는 어떤 관계인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러니까 자문관으로 파견을 받게 된 과정은 전임 자문관이 거기 사직하면서 유초중등 교육의 전문가를 좀 추천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추천받으셨다는 건데.

○교육부차관 오석환 어쨌든 추천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교육부장관이 정책자문관을 두 명을 두고 있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저희가 보좌관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파견 자문관이 있는데 민간 파견 자문관은 아시는 것처럼 KEDI 파견 자문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유초중등 교육에 직접……

○위원장 김영호 한 분은 이주호 장관 17대 국회의원 할 때 보좌관 출신 맞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자문관은 자기 보좌관처럼 가까운 사람을 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생전 모르던 사람을 자문관으로 뮤던 게 과연 국민들이 이해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지금도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어요. 지금 이수정 자문관이 말씀 주신 것처럼 초중등정책과 교원정책, 특히 늘봄학교와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에 깊이 관여했다 그래요. 이 두 사업이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이주호 장관의 중점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가장 앞장서서 전개한 분이 이수정 교수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실 거예요.

다음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옛날에 늘봄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대행을 하는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대행하다가 갑자기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변경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교육개발원은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늘봄중앙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요. 그런데 이 늘봄학교, 늘봄허브 같은 모든 프로그램은 이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수정 자문관의 영향력이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그 문제?

○교육부차관 오석환 일단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우선은 KEDI가 하고 있는 역할은 통계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만들고 하는 정책 지원 역할하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 역할은 그대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한국창의재단에서 하는 역할은 그러니까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대학이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질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창의재단

이 개별적인 사업으로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창의재단이 차관이 볼 때도 아주 적임자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기관 맞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역할은 그쪽 창의재단이, 실제로 이러한 실무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역할은 창의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이수정 교수가 리박스쿨 프로그램을 창의재단에 최대한 많이 선정할 수 있도록 압력 행사한 사실은 아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는 그건 알 수가 없고 저희 과정으로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수정 자문관이 약 2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대한민국 교육부를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여기예요. 이수정 교수가 자문관 2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분의 발언과 회의록과 그분의 문서 일체를 요구했더니 단 한 건도 없다라고 그러는데 유령이었나요, 그분이? 어떻게 2년 동안에 장관의 두 명밖에 없는 정책자문관의 활동 내역이 단 한 건의 문건도 없냐는 거예요. 그것 제출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은폐하시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우선 자문관은 정책 계선 라인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어떤 대화, 회의록이 없다 이거예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러니까 어떤 문서로 된 그분의 언사나 이런 것이 전혀, 기록이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냥 정책 컨설팅하는 자문 역할하는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만약에 그것 저희가 찾아내면 차관님 책임지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것 좀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되겠고.

늘봄교육국장님, 예혜란 국장님 나오셨어요? 마이크 좀 잡아 주시고.

이수정 자문관이 리박스쿨에서 창립한 단체에 MOU를 체결하도록 강요를 했다는 사실은 교육부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대선 이후에도 극우단체 토론회 개최를 계속 지시하고 그랬다 그러거든요.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저는 MOU 건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MOU 체결하도록 강요한 바는 있지요?

○교육부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강요했다기보다는 MOU 문건으로 가지고 와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그것 교육 공무원 공직자들이 동의 안 해 주셔서 결국 체결이 안 됐지요?

○교육부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이거 내부적으로 다 제가 제보받은 거예요. 그것 거짓말 치시면 안 되고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내용을

강요한 것을 느꼈던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부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제가 MOU……

○**위원장 김영호** 말씀하기 어려우면 그냥 말씀하기 다 그려세요. 거짓말은 치지 마세요, 대신.

○**교육부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예, 말씀드리기 좀 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본질의를 마쳤고 약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떨까요, 간사님?

그러면 4시 반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보충질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해도 될까요? 준비되셨지요?

첫 번째 질의는 백승아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백승아 위원** 차관님, 제주에서 고 현승준 선생님이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 분향소를 찾아서 조문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전직 교사 출신 위원으로서 차관님의 그런 신속한 행보에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제주에서의 사안은 지속적인 악성 민원으로 교사를 괴롭혀서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점에서 지난 서이초 사건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교사였던 제가 국회의원이 된 것도 서이초 사건이 계기였었고요 무너진 교육환경 바꾸기 위해서였는데 같은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서 너무 참담하고 유가족께도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인천 특수교사 사건도 그렇고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저는 굉장히 죄책감이 들고 좀 자책하게 돼요. 제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국회에 왔는데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차관님, 유족이 고 현승준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현 선생님은 제가 직접 제주에 방문해서 들었는데 제주에 계시는 과학 선생님들 중에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열정적이고 과학 관련 대회에도 늘 출전하시고 학생들 카톡방으로 핸드폰이 꽉 차 있더라고요. 학생들에게도 너무나 지도를 열심히 하셨던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분향소에도 정말 많은 제자들이 다녀갔고 제자가 기자회견까지 한 것 보셨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봤습니다. 저도 제자분 봤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렇게 좋은 선생님이셨거든요. 이런 순직 인정 건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좀 잘 쟁겨봐 주시길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이것은 절차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잘 준비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학연금공단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각자 다 준비가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서이초 1주기에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관련 성과와 과제에서 학교별 민원대응팀 99.8% 설치 등 악성 민원에 대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러나 교사 개인이 홀로 악성 민원에 대응해야 되는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그게 이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건 이후에 교육부는 악성 민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 방안 마련한 게 있으신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법률도 다시 추가적으로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민원 체계를 준비해 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그 과정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봤을 때는 기반은 잘 마련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작동이 안 되는 측면들이 여러 군데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민원 대책 개선 방안을 새로 준비하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7월·8월에는 시범 운영하도록 하고 9월 달에는 운영되도록 해 가지고 지금 각자 선생님들이, 개별적인 제도는 마련됐는데 실제로 작동이 안 돼서 직접 담당을 하시거나 또는 선생님의 교육적 열정에 의해서 아이를 상담하고 있는 일들을 제도로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꼭 개선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막기 위해서 제가 작년 대표발의한 일명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을 11월에 국회에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 주요 내용이 교육부장관이 학교 민원 계획 세우고 전자민원시스템 또 대응 체계 만들어서 교사 개인이 민원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요. 해당 법률이 올 6월 21일 날 시행을 앞두고 있었고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사건이 터져서 더욱더 너무 애석합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 사항 이행 위해서 교육부가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주신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춤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원래 6월 21일 이후부터 시행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어렵고, 지금 주신 말씀으로는 9월부터는 민원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 제가 이번에 유족도 만났고 교육감 또 관련 선생님들 다 만났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감님이. ‘이 교사 개인이 본인이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안 해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지 몰랐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4월부터 6월까지 쭉 악성 민원이 이어졌는데 하루에 10통이 넘는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그랬어요. 그동안은 모르셨겠지요. 다만 학부모가 교사를 교육청에 민원, 그러니까 신고를 했거든요. 그때는 아셨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시달렸다는 걸 아셨는데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교사를 학교에서 분리해 내지 않고 오히려 지금 벌어진 일들을 해결하고 나가라, 마무리하고 나가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악성 민원에 당하면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시달리다 보면.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악성 민원인을 어떻게 해결하고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분리시켰어야지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 대응 체계의 시스템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위에서 행정적인 만들어서 지시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직접 현장과 소통하시고 교장·교감한테 지시하세요. 그런 것 지시하실 수 있잖아요.

제도를 좋은 제도, 제가 지금도 관련 간담회를 하다 왔거든요.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 합니까? 교사들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요. 홈페이지에 올리는 걸로 홍보 끝 아니고요. 직접 교장·교감 불러다 연수시키고, 연수해서 학교에 전달 연수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교육지원청에서. 하실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하면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도 실제로 교육청이 학교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고 특이한 사항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핀포인트(pinpoint)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현장과 소통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다시 한번 제주중학교 선생님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방금 백승아 위원님께서 굉장히 자책하시고 ‘나의 책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승아 위원님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가 좀 확인을 할까, 아까 김민전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5월 16일 날 민원이 접수된 이후에 3일 만에 담당 장학사가 민원인과 통화하고 학교에 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월 19일이지요. 그래서 19일 날 학교장이 해당 교사에게 재발 방지 및 주의 경고를 즉시 조치했는데 이것은 교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징계적 성격을 띠는 조치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주의 경고를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제가 바로 직접 내려가 가지고 그 사안들을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지금 실제로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찾아내야 되는 과정들을 거치자고 그랬고 별도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제주교육청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니다. 그래서 그것은 준비가 되면 제주교육청이 그 방안을 가지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할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저희 지금은 모니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지영 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까,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수사 중입니다, 바로.

○서지영 위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해자이며 누가 피해자인지 그리고 어떠한 취지에서 선생님께 주의·경고 조치를 했는지 이 부분이 이번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19일 날 주의·경고 조치 이후에 22일 날 사고가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주의·경고가 과연 적절했는지,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불행한 사건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대한 분기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황을 파악하시고 의원실로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가 매우 섬세하게 확인을 하고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리박스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할 부분이 이쪽 단체에서, 늘봄교육연합회에서 파견한 강사는 11명이라고 하셨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서울교대를 서울교대연합회로 협약기관으로 돼 있고 서울교대가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실제 강사는 1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서지영 위원 11명.

그런데 아까 김민전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전국의 늘봄학교 강사는 12만 3000명이라고 하셨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12만 3000명입니다.

○서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1만분의 1도 안 되는 선생님이 나가신 거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했던 과목은 두근두근 실험과학 그다음에 오감으로 느끼는 미술 교육, 일견 열한 분의, 1만분의 1 되는, 늘봄 선생님 중에 거기에서 파견된 거고 그리고 실험과학이나 미술 교육을 했는데 과연 역사 편향 교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도 이게 현재까지의 팩트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 되는 역사교육을 하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안 되는, 1명이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을 너무나 과장해서 침소봉대해서 마치 늘봄교육 전체가 굉장히 문제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 듯한, 학부모님들께 또 교육현장에 불안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받고 있는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섬세한 배려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리박스쿨이라는 데서 무슨 자손군인가 이런 얘기를 저도 처음 들었는데, 자손군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손가락혁명군도 생각나더라고요. 아마 여기 교육부 관계자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게, 여러 가지 본인들이 원하는 행위들을 한 그러한 유사한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

해서 저희가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하게 교육위에서 표현하고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그 부분, 주의·경고 조치가 어떠한 취지에서 실행되었는지는 꼭 의원실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차관님, 제가 2025년 늘봄학교 시행방안을 보니 학부모님들의 90% 이상이 늘봄학교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있습니다. 또 내용도 보니까 기존의 교과에서 가르치지 않는 문화, 예술, 체육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늘봄교육이 새 정권에서도 더 확대 또 더 세밀하게 운영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지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도 우리가 잘 새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재원인데 2026년에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26년 이후에 3학년 이후에 확대하는, 어쨌든 늘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현장의 요구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으로 보면 초등학교 3학년 이후의 경우에는 하교 시간이 3시 이후입니다.

○**김준혁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초등학교 1·2학년이 대부분, 3학년까지가 대부분일 거고 그래서 현재 1조 20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산술적으로 보자면 6학년까지 하면 4조까지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학원 가야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냐면 이 늘봄교육이 굉장히 좋은 강점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문제점 혹은 잘못된 문제점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단국대학교 이수정 교수가 늘봄교육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세간의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수정 교수가 어떻게 정책자문관으로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는데 그건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수정 교수가 쓴 논문이, 2021년도 교육정책연구 28집에 쓴 논문 ‘온종일 돌봄 정책의 의제설정과정 분석’ 여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 주도로 작성된 교육개혁안을 성급하게 추진하게 될 때 결국 교육현장에서 정책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한 채 문제만 파생시키게 된다’, 이 논문의 맨 마지막 결론이 ‘정부 주도의 개혁안 추진 관행을 탈피하고 교육현장으로부터 요구와 문제를 더 고려하며 이와 관련된 관계집단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의 핵심 내용은 교육부 주도의 교육정책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 강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 때 돌봄과 방과후 정책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커요, 정부 주도로 하는 것이. 그런데 돌봄과 방과후를 합쳐서 늘봄으로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정책을 갖다 비판을 하고, 그래서 교육부 주도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낸 사람을 왜 교육부장관이 교육부 주도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정책자문관으로 불렀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정책이 과연 늘봄 정책에, 늘봄 정책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왜 그리냐 하면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까지도 해결하면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러면 차후에 더 많은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고 교육시키게 하기 위해서 인구정책까지도 고려된 내용인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문재인 정부가 했던 돌봄·방과후를 조금 더 새롭게 하고, 물론 이재명 정부에서 더 세밀하고 더 확대해서 더 좋은 정책 만들 건데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그렇게 할 건데, 왜 이 수정 교수처럼 이렇게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교육부장관은 불러들여서,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원래 하기로 했던 늘봄이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한 걸 조속하게 빠르게 한 거냐. 조속하게 빠르게 하면서 결국은 늘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게 된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늘봄 교사를 양성하다 보니까 이런 리박스쿨 같은 게 나오게 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정확하게 답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건 끝까지 저희들이 잘 정리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말씀 주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자문관의 역할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 교육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시면, 제가 교육부 출신으로서 정책을 차근차근 담당하는 정통 교육관료입니다. 돌봄·늘봄을 포함한 모든 정책들은 교육부의 동료 직원들이 같이 고심을 하고 시도교육청하고 거의 석 달 녁 달을 매주 현장을 같이하면서 만들어 놓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자문관이 특별하게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의혹은 제기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김준혁 위원** 제가 그러면 추가로……

○**위원장 김영호** 차관님!

김준혁 위원님, 발언 마치셨어요?

○**김준혁 위원** 예, 제가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제가 아까 이수정 자문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교육위원장이 아까 그렇게 교육공직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일부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내부의 제보가, 극우 단체와 MOU 체결하라고 강요하고 압박하고 이런 제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준혁 위원님이 그 비슷한 취지로 자문관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쪽의 쉴드를 칩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자문관을 보호한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위원장 김영호 지금 자문관을 보호하시는 취지지요, 그게.

○교육부차관 오석환 아닙니다. 정책의 과정에서 그것은 교육부의 역량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저는 차관님이랑 이것 가지고 시시비비 나누고 싶지 않은데 여러 가지로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면목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오히려 위원들이 문제 제기하기 전에 교육부에서 이런 이런 문제를 찾아냈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태도가 맞을 것 같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제가 오늘 좀 강도 높게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가,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으시니까 그 분노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도 좀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그건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차관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교육정책이 함부로 바뀌면 안 되겠지요? 동의하시지요?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우리 교육정책의 경우에 특별히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정책의 방향을 같이 토론해서 만들어 주신 기반 위에서 정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반 위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있으니까 국정철학을 반영해서 정책이 개선되고 발전돼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좋은 정책은 계속 계승하고 또 정책을 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RISE 사업하고 글로컬대학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개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혁신 중심 그다음에 대학지원체계(RISE), 이것은 사실상 지방대학 정책의 핵심의 틀이라고 우리가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김대식 위원 국비가 2조가 들어가고 지방재정이 들어가는데 지방재정이 어려운 시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진입장벽이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실시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1단계에서 보시면요 저희가 2조 재원이 들어가면 지금 매칭으로 들어가는 재원이 20%가 컴필서리(compulsory)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억 인데 종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약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재정이 대학에 지원되더라도 그건 체계적인 지원이 아닌 단편적인 지원이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RISE 체계 내에서, 전략적으로 수립한 계획 내에

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효과적인 재원으로 되어 있는 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그것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효과적으로 지방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써 활용하는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걸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상호 학습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글로컬대학은 이제 최종적으로 다 완성이 된 겁니까,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글로컬대학은 원래 3년간에 걸쳐서 30개팀 내외를 선정하기로 돼 있는 거고 그 프로세스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새 정부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대학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리라 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2년 하고 올해 3년 차인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단기간에 성적을 내고 실적을 낸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일이 년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종합적인 판단은 아니겠지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은 그래도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가 위원님들께 특히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서 법안 심의를 하실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들이 있는데, 글로컬대학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위에서의 텁다운 방식이 아닌 지방에서 기획하고 지방에서 각 대학과 기관과 협력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방 내에서의 변화·혁신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각 대학 간의 연합을 이루었으면 연합 여기에 대한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들이 마련된 건 아실 겁니다. 1도 1국립대학의 강원대학, 그다음에 각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순천대학의 모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러한 다양한 지방 특성을 맞춰 가지고 운영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마련됐고 이게 추가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전략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글로컬대학은 정책 중에서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전문대학 직업교육 중심’에 보니까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의 118개 전문대학에 2025년 기준 총 5555억 원을 투입해서 미래형 고등직업교육을 혁신해 미래 직업교육 허브로 삼겠다 이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도 지난번에 전문대학협의회에 가서 토론도 하고 논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새로이 변화하는 평생학습 시대에 4년제 대학과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강점을 만들어 내는 일들을 전문대학협의회에서 같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전문대학이 기존에 있는 체계가 아닌 새로운 체계 내에서 강점을 찾아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발전시켜 나간다고 그러면 지역 내에서 고등직업교육의 핵심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모델들이, RISE 체계에 보면 고등직업교육의 영역이 하나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지금 모델들도 마련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컬대학에서도 모델이 마련되고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가능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좋은 정책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좋게 지원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단절 없이 계승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저희 계속 상의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을호 위원** 정을호 위원입니다.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한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민간자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앞서 강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교육부의 민간자격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도 단 하루 만에 창의체험활동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제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민간자격 검정관리규정을 확인해 봤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면)

자료에 보듯이 규정을 보면 응시자격, 검정방법, 검정위원 위촉, 응시료 등 체계적인 절차를 갖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영규정 14조에 보면 검정운영 담당자는 A·B·C 기관 등에 검정진행을 공지하도록 돼 있는데요. 명시된 기관 중 제가 B 기관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 자격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왜 자신들이 이 단체에 들어가 있는지 황당하다고 말씀까지 주셨거든요. 나중에 들어 본 바에 의하면 규정은 형식상 작성된 것이며 리박스쿨 측에서 수료자 명단만 보내 주면 그냥 자격증을 그대로 발급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야말로 자격이 그냥 거의 졸속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차관님, 혹시 지금 교육부에 등록된 민간자격 중 늘봄 방과후 관련 자격증이 몇 개인지 혹시 모르……

○**교육부차관 오석환** 25년 최근에 10여 개가 등록된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제가 늘봄 방과후 키워드로 등록한 걸 검색을 해 봤는데 민간자격만 765개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765개에 달합니다. 이렇게 지금 교육부의 민간자격 관리감독 기능이 조금 부실한데 리박스쿨과 같은 이런 이념단체가 수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교육 현장을 좀 먹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도 이번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래 늘봄학교에는 늘봄학교에 적합한 자격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면 늘봄학교에 들어온다’는 자격제도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격제도인 민간 등록제도에 의한 자격제도에 따라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은 본인이 입증을 하는 방식이 민간자격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

식으로 해서 늘봄이나 아니면 다른 수요가 생길 경우에 민간 등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등록되는데, 현재의 절차로는 제외되는 대상이 아니면 등록하도록 하는 체계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이 문제가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도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듯이 765개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말씀 주셨는데 현장에는 이렇게 있으나마나 한 민간자격 취득을 위해서 지금 사실상 장사하는 행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장사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화면을 보면 지금 문제 되고 있는 발급기관이 등록한 진로진학상담사 자격증과 진로상담전문가 자격증 규정의 일부인데요 자격증의 이름만 빼고 다 똑같습니다. 그대로 다 똑같습니다.

차관님, 이번 사태는 교육부의 관리 부실, 관리 방만 이런 부분의 결과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이후 향후에?

○교육부차관 오석환 적절하게 지적 주셨습니다. 지금 민간자격 등록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민간자격에 참여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보면 지금 그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민간자격증이 폭증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질 관리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저희가 크레디트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자격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차관님, 교육부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리박스콜과 관련된 민간자격이 31개 있더라고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건 지금까지 제기된 것들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요소들이고요 명확하게 연관성이 확정되면 계속 추가해서라도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러면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이 뭐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으로 보면 허위과장광고를 한 부분들은 바로 거기에 따른 시정명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요.

○정을호 위원 그러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건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일단은 자격제도가 기본적으로 등록제도로 운영되는 이유는 소비자가 찾아 가지고 자기의 역량을 취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완전히 재구조화해 가지고 검정제나 이런 걸로 하지 않는 한 안 되는 부분……

○정을호 위원 늘봄이라는 부분이 공공교육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교육부차관 오석환 늘봄에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자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 한다고 그래서 늘봄강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일차적으로 저희가 알려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왜냐하면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자격제도 일반에 대한 정비 작업을 하고 그중에 특히 넓은 정비 작업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 꼭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차관님, 윤석열 대통령이 늘봄학교 현장을 방문한 것이 있었잖아요, 하루에 2000만 원 넘게 너무 과도하게 돈을 쓴 것 아니냐라고 아까 제가 제기했던 거기에도 차관님이 그 때 당시 교육비서관으로 현장에 있었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 사진 보니까 학생들하고 같이 있는 저 그림의 제일 오른쪽에서 한 두 번째가 아마 차관님 같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당시 교육비서관이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때 당시에?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김문수 위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늘봄학교를 방문한 이후에, 바로 한 달 뒤에 교육부장관이 '늘봄학교를 1년 앞당겨서 시행하자'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보니까 시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통령이 1년 당기라고 지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총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거꾸로 그냥 자체적으로 교육부에서 교육부장관이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차관으로 계신 교육비서관께서 제안을 한 겁니까? 1년을 갑자기 이렇게 앞당기라는 걸 누가 한 거예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국정과제가 진행이 되고, 정책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온전히 부총리의 결정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문수 위원 이주호 부총리께서 결정을 했어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대통령께서는 그때 행사를 해 가지고……

○김문수 위원 대통령이 빨리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교육부차관 오석환 국정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 보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총리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문수 위원 이주호 부총리가 스스로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는데 1년 앞당기라고 한 걸 했다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관련된 특별한 지시가, 1년 앞당기거나 그런 지시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래서 이주호 부총리가 결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필요하다고 했던 일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돌봄 대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요.

○**김문수 위원** 학부모 인식조사 이런 것도 보면, 한번 볼까요?

예비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 조사에서도 보면 더 질 높은 프로그램과 강사를 요청하는 게 69% 거의 70% 가까이, 이게 많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보면 교사들이 이 부분의 업무가 더 과중된다든가 프로그램 질 저하 또 행정 부처 간의 책임 소재 불명확 또 예산·인력 지원 미흡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하여간 늘봄학교 관련된 여러 가지 불만이나 문제점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많이 제보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1년을 앞당겨서 할 이유가 도대체 뭐지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잘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잘못된 일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리박스쿨처럼 엉터리 강사 문제도 생기고.

○**교육부차관 오석환**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늘봄학교 그 자체가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빨리 당긴 이유는 뭐냐?’ 그것은 국정과제로서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돌봄 대기……

○**김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 중에, 그전에 방과후학교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방과후학교는 지금도 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살려 가면서 늘봄을 자연스럽게 잘 맞춰갔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전 정권에서 잘 시행하고 있던 방과후학교라는 프로그램들을 밀어내고 없애려다 보니까 새 정권에 늘봄학교라는 이것을 만들어서 리박스쿨 같은 이런 강사들을 투입하려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1년 빨리 시행을 하는데다가 엉터리 교육이 진행돼 버렸다 이렇게 한편으로 저희들이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 장, 학교 비정규직 소위 교육공무직이라는 게 있어요, 한 17만 명 정도 되는 걸로. 그런데 이 중에 방학 중 비근무가 약 9만 명 정도 되는 거지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스스로 파악한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방학 때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근무 형태가 있습니다, 직렬별로.

○**김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근무 형태든 어쨌든 간에 어떻게 사람을 고용을 해 놓고 ‘방학 중에는 학생들 수업이 없으니까 그냥 월급을 못 주겠다’, 이런 일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이러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현실하고 바람직성하고 사이에서 개선할 것인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튼 이것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도 연구,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김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호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미 위원 저도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축공사 같은 것 입찰 딸 때도 입찰을 받으려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어떤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름만 다른 회사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 넣어 가지고 걸리면 똑같은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딱 이 사안이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효숙이라는 그 대표는 리박스쿨이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리박스쿨도 이름이 다르잖아요. 아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리박스쿨은 사실 늘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진선미 위원 등록돼 있는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무슨 지킴이’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확인된 것만도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녀지간이고,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본인이 이사장이고,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이건 손효숙 대표가 대표를 맡고 있고, 우남네트워크 공동대표도 역시 손효숙 대표가 맡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관계돼 있는 이름이 몇 개나 될지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민간자격 발급 절차가 간소해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들이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 자격증을 딸 수 있게 그렇게 열어 주는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자격증의 내용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하루 1시간에 그냥 똑딱 돈 주고 따 올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계속 커리어를, 경력을 관리해서 마치 그게 신뢰가 되고 뭔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 왔던 것처럼, 경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교육부 소관의 민간자격만 1만 1238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점검을 하거나 전수조사를 전에 해 봤을까 싶어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말씀드린 대로 자격 제도 중에서 민간 영역으로 돼 있는 부분은 등록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고요. 나머지는 퀄리티 컨트롤이 되고 있는 공인자격증하고, 그러니까 국가공인 그다음에 민간에서는 국가공인 등등으로 체계화돼 있습니다. 이 체계는 원래 자격 제도를 도입할 때 개인 중심으로 운영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 문제를 보면서, 자격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격 제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했고요. 그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래서 하여튼 빠르게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어쨌든 둘봄학교나 돌봄교육은 이미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같이 병행돼야 될 텐데 신뢰를 회복하려면 양쪽을 빠르게 정리해서 자격이 어느 정도 누구에게 발급됐고 그 발급된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 있고 이런 것을 그냥 수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자체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기사를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손효숙 씨가 관계된 것만 해도 벌써 5개인가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또 다른 단체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사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부에서 전수조사 하겠다고 내려보낸 공문 안에는 그 이름은 없대요. 그러니까 정말 기관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그런 놓쳐진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정비해서 좀 빠르게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리고 의대예요.

제가 4월 달에 질의한 것 기억하십니까, 턴키 방식으로 하는 것?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진선미 위원** 안 됐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재심 신청하겠다고 또 그러셨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재심 신청했는데 또 부결되었습니다.

○**진선미 위원** 기각됐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명백하던데. 그 사유 자체가 새로운 공법이 있거나 이런 것 아니다, 그래서 턴키 방식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했는데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시고 다시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1년이 넘게 지연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미 의대 정원 확충이라는 것이 멈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모든 문제를 재논의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약간 방치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턴키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정원에 필요한 수준으로 해서 1년을 당겨 가지고 하겠다는 방식이었고.

○**진선미 위원** 그렇지요. 짧게 하겠다는 취지였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사실은 거기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런 방식으로는 좀 느슨하다고 본 것이었고,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재정사업으로 하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계획되어 있는 그 사업은 일반 재정사업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턴키 방식으로 하는, 1년으로 단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재정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는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모는 어차피 재정 당국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곧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재심하면서 또 몇 개월이 지연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기정사실처럼 기존의 패턴으로 했으면 오히려 몇 개월을 단축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가야 되는 건데 좀 빠르게 당기겠다고 또 미루고 미루고 다시 신청하

고 그거 결과 기다리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님, 그런데 사실 저희는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저희도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호**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리박스쿨 관련돼서 자격증이 너무 많이 발부가 돼서 교육부에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허술하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자격증 없이도 늘봄교실의 교사로 채용될 수 있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자격증이 요건도 아니고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 자격증을 왜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자격증 없이도 자기의 전공 내지 자기의 장기가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취업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자격증을 발부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사실 자격증은 필수조건도 아닌데 왜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다들 고생을 하고 자격증 받는 데, 교육부는 거기에 대한 등록 문제부터 관리 허술에 대한 오점을 남긴 것 아니에요. 이거 좀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그 본질을 지적하신 건데요. 사실은 늘봄에 필요한 자격증이 주어지지 않고 역량을 증명하는 방법도 자격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학위라든지 아니면 이수한 교육이라든지 경력을 가지고 입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몇 개의 자격증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그것인 것처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마도 자격 과정은 만들어 놨으되 그 자격 과정에 진짜로 따고자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영호** 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남설은 되어 있으되 실제로는 작용이 안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조직적인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몇 분들은 참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니까 그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오늘 상임위를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늘봄학교의 교사를 채용하는 조건 중에 자격증이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들이 그것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걸 좀 오해하시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요 이번에 이렇게 극우단체들이 아이들에게 극우화 교육시키는 이런 우려도 있지만 굉장히 허술함이 이번에 노출이 됐는데, 정말 저는 학부모님들 너무 불안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릴까 안 드릴까 했다가 그래도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 다시 한번 이걸 정비해서 더 안전한 늘봄학교를 만드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흉악 범죄자들이 늘봄학교에 혹시라도 침투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거든요. 전과 조회 기록이나 그

런 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자신 있게 학부모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필터링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제도적으로는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어쨌든 아까 학교폭력이나 교권보호와 마찬가지로 제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촘촘하게 저희가 절차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직까지는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까지의 수준은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우선 저희 정부는 최대한 그런 노력들을 하도록 하는데,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개별 강사인 경우에는 프로그램별로 학교에서 직접 시연까지 다하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요. 교사의 범죄 조회 그런 것들이 잘……

뒤의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교육부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교육부 담당 국장입니다.

지금 늘봄학교 강사로 채용될 때는 기존의 방과후 강사와 동일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된 범죄 조회와 성 관련된 범죄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아동학대와 아동 성범죄나 그런 것은 필터링이 되고 나머지 다른 범죄는 필터링이 조금 소홀할 수 있겠네요.

○**교육부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예, 관련 법령이 아직 미비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정말 학부모님들이 늘봄학교에 아이를 맡겼을 때 정말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도 관련된 법안을 하나 낼게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부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예.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강경숙 위원** 차관님, 오늘 현안질의 주제가 리박스쿨이기는 한데요. 그에 못지않게 좀 시급한 현안을 한 두어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의대 문제이고 또 AIDT인데요. 1년 넘게 의정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현재 의대생 8305명이 유급을 예정하고 있고요. 제적 대상도 몇 명인지 아세요? 제적 대상도 46명입니다. 아직도 학사운영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태인데 결국은 트리플 운영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현실화가 됐는데.

(영상자료를 보면)

여기 한번 자료 보시면 국립대 의대로부터 받은 자료 중에서 경상국립대를 보니까 예과 1학년이 174명으로 유급 대상자로 확정이 됐거든요. 이다음에는 79명이 새로 입학합니다. 그러면 합치면 253명인데 원래 한 해에 79명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내년에 받아야 될 1학년이 253명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3배가 넘어 버려서 더블링을 넘어서 트리플링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게 되면 실습의 문제가 당연히 있겠지요. 의대는 실습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의 질이 저하가 되면 당연히 의료인들의 양성이 질적 저하가 야기될 수밖에 없을 텐데 교육부에서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이 부분 상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보시면 제가 알기로 3월 7일 날 보도자료에서, 의학교육위원회를 신설하셨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저희가 지금 의학교육위원회 협의 진행 중이고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구성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두 달 있다가 다시 보도자료를 보니까 5월 9일에도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구성되셨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내부 논의, 복지부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강경숙 위원** 빨리 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새로운 정부가 할 일이 무척 많을 텐데 이게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3월부터 그리고 아직도 되지도 않고 그러면 그다음에, 결국은 단순하게 맡겨 놓을 얘기가 아닌데 많이 산적해 있을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미리미리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소통 구조도 만드시고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체계도 마련하셔야 됩니다. 서둘러 주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리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두 번째, AIDT 말씀드리겠습니다.

AIDT 보니까 창의재단하고 평가원에서 6월 4일 날 이렇게 2025년 AIDT 검정 신청 온라인 접수를 마감했더라고요. 그런데 교사나 학부모나 교과서 발행사들이 AIDT가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운영되는지 아직도 잘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검정 일정을 이렇게 강행하셨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검정 일정은 작년에 예고한 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새 정부 들어왔으니까 새 정부에서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검정 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확정해서 진행이 됩니다.

○**강경숙 위원** 여하간 이렇게 아직도 모호한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주호 장관 본인의 과욕으로 이것을 졸속으로 밀어붙인 거라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을 하실 텐데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주호 장관이 한 것을 보니까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출판사하고 갈등을 야기했고요.

그래서 교과서 업체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거기서 들어간 교육부하고 교육청의 배상액이 얼마냐면 23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던 교과서 발행사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에요. 일각에서는 손실 규모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에 달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책임을 차관님과 장관님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행정소송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이력이 있어요, 2300억 원이나. 그러니까 지금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까지 다다를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책임지시겠습니까? 게다가 구상권까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가능성의 제기된다고 하면 준비가 되어 계세요? 구상권 청구까지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나름대로 저희들의 노력이니까요.

○**강경숙 위원** 그래야지요. 막대한 정부 재정 이거 책임 어떻게 지셔야 될지, 정말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돈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 와중에 지난 2일 날 아주호 장관이, 최근에 교육부 기자실에서 기자가 서울교육감 출마를 물었거든요. 거기에 국가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거기 에 따른다고 말한 게 있습니다. 지난 2일 날에, 최근 교육부 기자실에서 서울시교육감의 출마를 묻는 질문에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상 긍정의 답변이라고 생각되 는데요. 지금 이러한 많은 사태가 불거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관의 태도가 차관님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도 아직 서울시교육감에 관한 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간사님 순서입니다.

○**문정복 위원** 예혜란 늘봄국장님 잠깐 마이크 들고 일어나 보시겠어요?

지금 교육부에서 리박스콜과 관련한 집중점검 대상기관들을 발표하셨지요?

○**교육부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예.

○**문정복 위원** 그 기관들을 보면 리박스콜 그다음에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한국늘봄교 육연합회,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학회 그리고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이렇게지요?

○**교육부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예, 맞습니다.

○**문정복 위원** 이거 외에 다른 기관들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부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저희도 좀 더 파악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언론에서 보도된 기관들도 있었고 관련해서 더 의혹이 제기되는 기관들이 있으면 다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런데 실제로 리박스콜과 연관이 되어 있고 강사를 양성해 냈던 생명 과학교육연구회는 진즉부터 드러났던 기관인데 여기는 왜 빠졌어요?

○**교육부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저희가 조사를 시작한 것은 손효숙이라는 대표 가 직접적으로 활동했던 기관 중심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제기돼 있던 기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국에 늘봄강사가 10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 11명만 연관돼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실제로 리박스콜과 관 련된 단체들이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일명 교협—그다음에 대한민국교원조합, 생명과학교육연구회, 우남네트워크 그리고 이른바 우파 성향 70개 단체 가 포함된 70+ 그다음에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늘봄교육연합회, 프리덤칼리지, 지금 드

려난 것만 이만큼에요, 드러난 것만.

그런데 이 중에 우파 성향 70개 연합단체인 70+ 이런 데는 댓글을 중심으로 다는 데 거든요. 여기는 자격증과 무관하지만 이 사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자격증에만 한정돼서 하다 보니 다른 것들이 다 빠져 버린 거예요. 교협이라든가 대한교조라든가 생명교육연구회라든가 이른바 70+ 이런 기관들이 다 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알맹이는 썩 빠져 버리고 지금 쭉정이들만 갖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세요?

○교육부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오늘 언론을 통해서 그 기관이 있다는 부분을 좀 파악을 했고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원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전광훈 목사 며느리 양메리라고 아시지요?

○교육부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잘 모릅니다.

○문정복 위원 진짜 이럴래요? 지금 리박스쿨 문제 터지면서 제일 가장 핫한 인물이 양메리인데 그것을 늘봄국장이 모른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교육부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언론을 통해서……

○문정복 위원 알았어요, 몰랐어요?

○교육부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언론을 통해서 전광훈 목사와 관련돼서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부분 이외의 양 모 씨 그 부분, 실명까지는……

○문정복 위원 양메리라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은 강사도 아니고 전공이 무슨 심리학 전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리박스쿨 가서 아이들 대상으로 영어로 역사를 수차례 강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다 드러난 사실이고 우리가 언론 조금만 켜 보면 아는데 교육의 늘봄 담당자가 사회적 파장이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가장 그 위에서 있는 전광훈의 며느리가 강사로 활동했다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 문제 아닙니까?

○교육부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전광훈 목사와 연관된 리박스쿨의 관계성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말씀하신 며느리의 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인지하지 못한 점이 좀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사실 수박겉핥기 한 거예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국민적 열망이 가장 큰 늘봄 돌봄 이 시스템에 말도 안 되는 극우 성향의 카르텔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먹잇감처럼 다 집어삼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아이들을 돌볼 곳이 없어서 돌봄교실에 맡긴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나왔던 김주성 연취현 장신호 이수정 손효숙 김은총 양메리 그리고 정부영 트루스코리아 대표,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청문회 불러서 이 리박스쿨과 관련된 연관성들을 우리가 쟁겨 내야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게 뭐냐 하면 이것을 대선에 악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댓글을 통해서 대선에 악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70+ 같은 데는 대단히 위험한, 아주 극우 성향으로 똘똘 뭉친 단체들이 모여서 댓글 작업했다라고 지금 여겨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교육부가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냥 풀어놔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한 것 갖고는 도저히 이것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불러내려면 청문회를 통해서 증인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청문회를 요청하는 바이고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명확한 판단을 요청드리는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조정훈 간사님 질의 안 하신다고 그러고요.

여야 위원님들 혹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 없으시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문정복 간사님이 청문회 제안을 주셨는데요. 다른 증인들은 여야 간사님들께서 상의를 해 보시고, 사실 저는 이주호 장관이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온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우 유감입니다. 이것은 정말 국민을 대하는 태도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주호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받았지만 현재 이 순간도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교육부장관이고요 또 리박스쿨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답변 해명 사과를 하셔야 될 직책에 있으세요. 그런데 이주호 장관이 오늘 사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서를 제출했고 그것을 국민께 공개를 했더니 정말 많은 국민들이 더욱 공분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수사는 수사대로 여러 가지 이 문제의 실체가 드러나겠지만 저는 이주호 장관, 이수정 교수, 손효숙 대표, 이 세 분만큼은 반드시 나오셔서 우리 국회에서 억울한 면이 있으면 국민 앞에서 해명하시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국민께 고개 숙여서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청문회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두 분이 혹시 청문회 얘기를 해 보셨나요?

○문정복 위원 아니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위원장 김영호 안 해 보셨어요?

오늘 처음 얘기를 하셨으니까 조정훈 간사님과도 청문회 관련된 협의를 해 주시고요. 아마 조정훈 간사님께서도 야당 위원님이 되셨지만 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말씀해 소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늘봄학교를 다시 좀 더 발전된 상황에서 학부모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크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혹에 대한 보도가 있어서 아직도 국민들과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그런 걱정과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청문회를 통해서 꼭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제도적인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오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박성준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김준혁 위원님의 서면질의가 있으셨고요.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교육부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강경숙 김대식 김문수 김민전 김영호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정을호 조정훈 진선미

○첨가 위원(2인)

고민정 김용태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백선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윤상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차관 오석환

차관보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인재정책실장 최은희

책임교육정책실장전담직무대리 소은주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학생건강정책국장 이해숙

대변인 구연희

감사관 김도완

사회정책협력관 정병익

디지털교육기획관 김현주

정책기획관 배동인

글로벌교육기획관 하유경

인재정책기획관 이주희

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의대교육지원관 김홍순
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전진석
교원학부모지원관 장미란
영유아지원관 박대림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김태준
상임위원 정대화
사무처장 최수진

【보고사항】

○의안 회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6.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6.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6)

이상 2건 1월 7일 회부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9)

이상 3건 1월 9일 회부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0.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4)

1월 13일 회부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4.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8)

1월 15일 회부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5.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4)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5.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0)

이상 2건 1월 16일 회부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6.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8)

교육불평등 해소법안

(2025. 1. 16.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6.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6.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6)

이상 4건 1월 17일 회부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0.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0.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0.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0.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0.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0)

이상 5건 1월 21일 회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1.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1.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7)

이상 2건 1월 22일 회부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2.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2)

1월 23일 회부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7)

이상 2건 1월 31일 회부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1.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5)

2월 3일 회부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6)

이상 5건 2월 7일 회부됨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2. 7.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6)

이상 2건 2월 10일 회부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0.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8)

2월 11일 회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1.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1.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6)

이상 2건 2월 12일 회부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2.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2.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2.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3)

이상 3건 2월 13일 회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3.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3.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3.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3.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3.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3.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3.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8)

이상 8건 2월 14일 회부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4.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5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4.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60)

이상 2건 2월 17일 회부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7.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7. 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7.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7.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6)

이상 4건 2월 18일 회부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8.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8.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1)

이상 3건 2월 19일 회부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9.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3)

2월 20일 회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1.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1.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1.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4)

이상 3건 2월 24일 회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4.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4.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4.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3)

이상 3건 2월 25일 회부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5.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5.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5)

이상 2건 2월 26일 회부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6.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6.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9)

이상 2건 2월 27일 회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7.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7.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7.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7.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7.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8)

이상 5건 2월 28일 회부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8.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8.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0)

이상 2건 3월 4일 회부됨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4.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4.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4.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4.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5)

이상 4건 3월 5일 회부됨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 3. 6. 김준혁 의원·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9)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2025. 3. 6.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0)

이상 2건 3월 7일 회부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8)

3월 11일 회부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1.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1.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8)

이상 2건 3월 12일 회부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2.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5)

3월 13일 회부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3)

이상 3건 3월 14일 회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8)

이상 2건 3월 18일 회부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2)

이상 3건 3월 19일 회부됨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9)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3)

이상 5건 3월 21일 회부됨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2025. 3. 21.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5)

이상 3건 3월 24일 회부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7.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7.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7)

이상 2건 3월 28일 회부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31.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7)

4월 1일 회부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3)

4월 2일 회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7.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7.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6)

이상 2건 4월 8일 회부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9.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9.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9.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9.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9.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9)

이상 5건 4월 10일 회부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0.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0.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4)

이상 2건 4월 11일 회부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1.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1.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1.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9)

이상 3건 4월 14일 회부됨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2)

4월 15일 회부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5.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0)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

(2025. 4. 15.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0)

이상 2건 4월 16일 회부됨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6.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5)

4월 17일 회부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7.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8)

4월 18일 회부됨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025. 4. 22.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2.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1)

이상 2건 4월 23일 회부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3.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9)

4월 24일 회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4.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4.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8)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2025. 4. 24.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4.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3)

이상 4건 4월 25일 회부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5.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7)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5.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5.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5.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7)

이상 4건 4월 28일 회부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9.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9.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2)

이상 2건 4월 30일 회부됨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21)

이상 2건 5월 2일 회부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2)

이상 2건 5월 7일 회부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7.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9)

5월 8일 회부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9.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0)

5월 12일 회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3.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5)

5월 14일 회부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4.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4.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4.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4.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1)

이상 4건 5월 15일 회부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0.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7)

5월 21일 회부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8.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17)

5월 29일 회부됨

○ 청원 회부**학생 성폭력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2025. 1. 11. 김가을 외 53,65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81)

1월 13일 회부됨

보육료인상에 관한 청원

(2025. 1. 22. 남궁빈 외 50,07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93)

1월 23일 회부됨

○ 행정입법 제출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일자	공포번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2025. 1. 7.	3518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 1. 14.	3519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 1. 21.	3521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 1. 31.	3523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 2. 11.	35253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2025. 2. 25.	35282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2025. 2. 25.	3528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 2. 25.	35284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2025. 4. 8.	3543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5. 20.	35504
고등교육법 시행령		2025. 5. 27.	35536
고등교육법 시행령		2025. 6. 2.	3555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령	2025. 6. 2.	3555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 6. 2.	3555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2025. 2. 7.	349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일자	공포번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 2. 25.	350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 2. 25.	351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 2. 27.	35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2025. 3. 4.	353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		2025. 3. 10.	35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25. 3. 20.	355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025. 4. 18.	356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2025. 4. 28.	357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5. 1.	358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2025. 6. 2.	359